

第260回國會
(臨時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6年6月22日(木)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간사 선임의 건
2. 주요업무보고
 - 가. 교육인적자원부(본부)
 - 나. 국사편찬위원회
 - 다. 대한민국학술원
 - 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마. 교육인적자원연수원
 - 바. 국제교육진흥원
 - 사. 국립특수교육원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審査된案件

1. 간사선임의 건 4
 - 간사(유기홍·임해규)인사 4
2. 주요업무보고 4
 - 가. 교육인적자원부(본부)
 - 나. 국사편찬위원회
 - 다. 대한민국학술원
 - 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마. 교육인적자원연수원
 - 바. 국제교육진흥원
 - 사. 국립특수교육원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32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엄호성·유승민·윤건영·박세환·김기현·임해규·이혜훈·박형준·박재완·이인기·이근식·고조홍·최구식·이계경·전여옥·안상수·고경화·이성권·이재오·신국환 의원 발의)(계속) 32
2. 주요업무보고(계속) 33
 - 가. 교육인적자원부(본부)
 - 나. 국사편찬위원회
 - 다. 대한민국학술원
 - 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마. 교육인적자원연수원
 - 바. 국제교육진흥원

사. 국립특수교육원

(10시10분 개의)

○**委員長 權哲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현식**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權哲賢**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겸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17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수고하실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해결해 나가야 할 교육문제가 산적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별다른 부존자원 없이 높은 교육열 하나로 많은 기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 급속하게 다가올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적 자원의 개발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련 쟁점법안과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등 현안마다 반복되는 이해대립과 갈등양상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시는 훌륭한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난마처럼 얽힌 교육문제에 대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교육문제에 관한 한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그리고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 인적자원 강국으로서

의 위상 정립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분발을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김교홍 위원님부터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교홍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해도……

○**委員長 權哲賢** 예,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김교홍 위원** 저는 인천 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전에는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전기에 교육위원을 하셨던 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 서울 광진갑 출신의 김영춘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회인데 여야 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많이 생산해 내는 효율적인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병두 위원** 민병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민석 위원**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이었고요, 이번 교육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흥 위원** 유기흥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교육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당은 아홉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새로 오시게 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위가 이번에 열린우리당에서는…… 한나라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인기있는 상임위가 되었다는 점인데 교육이 대접받는 그리고 교육위

원을 서로 하려고 하는 국회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비례대표 의원 이경숙입니다.

인기 상임위에 오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교육적으로 사고하고 교육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위원 비례대표 이은영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교육담당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자 출신으로 교육위에 오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생각하고요. 상반기에 교육위 법안처리가 늦어진 것 같은데 우리당은 분위기가 쇠신되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성과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최재성입니다.

2년 동안 교육위를 했는데요, 다시 또 하반기 교육위를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데 긴 터널을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반기 교육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우려스러운 평가가 많았는데 하반기에는 상생하고 협력해서 기적적으로 교육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저도 일조를 할 테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다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한나라당 김영숙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여섯 분의 훌륭한신 열린우리당의 위원님들을 다시 맞게 되었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교육위는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국민의 관심과 또……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학생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후반기에는 정책과 입법이 사람을 위하는 것으로 마련되기를, 같이 상생적으로 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실황 중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군현 위원 이군현 위원입니다.

전부터 계시던 분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새로 오시게 된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든 국가 발전의 근본이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올바른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주호입니다.

한나라당에서 교육담당인 제5정조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산적한 교육 문제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부천 원미갑 임해규입니다.

새로운 분들을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그리고 기대되는 바도 큼니다.

고맙습니다.

○정문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설악산, 금강산이 있는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 정문헌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대구 수성율이 지역구인 주호영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법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다고 자부하는데 실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순영 위원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순영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교육위를 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만큼 실천을 해서 하반기에는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상임위보다 아마 교육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제일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0여 건이 넘습니다. 이것이 상반기에는 교육상임위에서 다뤄지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잘 아시겠지만 사학법 때문에 거의 법안이 다뤄지지 못했습니

다. 하반기에는 중요한 법안들이 정말 심도 있게 다뤄져서 우리나라 교육에 발전이 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충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구기성 전문위원입니다.

김현식 입법조사관입니다.

채수근 입법조사관입니다.

임종수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은규 입법조사관입니다.

강준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전진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1. 간사선임의 건

(10시23분)

○**委員長 權哲賢**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오신 열린우리당 소속 유기홍 위원님과 한나라당 소속 임해규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유기홍·임해규)인사

○**委員長 權哲賢** 그러면 두 분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홍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전반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들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아까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생산성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후반기는, 지금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과 연계되어서 많은 문제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교육의 미래만 보고 앞으로 나가는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 간에, 교섭단체 간에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다음은 임해규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먼저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일을 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양해해 주신 열린우리당, 그리고 민노당 최순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위원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분위기를 아는데 부드러운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이 참 부드러운 것이잖아요? 상생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마침 또 열린우리당의 유기홍 위원님이 제 선배이시고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분이셔서 후배가 하는 부탁을 잘 들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드러운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하여간 참 다행스럽습니다. 두 간사님께서 학교의 명예를 걸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간사님들의 좌석 이동은 정회 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2. 주요업무보고

가. 교육인적자원부(본부)

나. 국사편찬위원회

다. 대한민국학술원

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마. 교육인적자원부연수원

바. 국제교육진흥원

사. 국립특수교육원

(10시26분)

○**委員長 權哲賢**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와 6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받은 다음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로이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인적 자원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가지신 권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교육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교육을 통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낙후지역·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동반성장의 기틀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올해를 교육격차해소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적어도 1군 1개의 우수한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확대하는 사업, 방과 후 학교의 본격 도입, 대학생 멘토링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간·소득계층 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4만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660만 중졸 미만의 저학력 성인들을 위한 문해교육, 탈북자 자녀라든지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등 새롭게 등장하는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노동시장의 유동성 증대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조기 진입에 따라서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생애에 걸쳐 고용 가능성을 높여 주는 평생·직업교육체제의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명문 특성화 학교의 육성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를 명실상부한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을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키워 주는 교육기관으로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군장병, 성인, 중고령자 등 전 국민의 인적자원 개발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적 통용성이 높은 학제의 개편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지식과 기술

순환의 주기가 단축되는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정책의 종합과 조정의 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5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상호 연계하고 인적자원 수급 간의 조정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전 국민의 인적자원에 관한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로 산업 수요와 연계된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대학 육성을 위해서 대학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대학이 산업과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실질화하는 등 우리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미래 국부를 창출할 연간 2만 명의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착수한 제2단계 BK사업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난 4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법학·의·치의학·경영전문대학원을 도입, 정착시켜 나가고자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특성화 분야로 정부의 자원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의 대학지원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초·중등교육을 혁신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교 운영 등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서 교육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대폭 개선하여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교원의 직무수행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전국 150여 개 학교에 단계적으로 교장초빙·공모제를 실시하여 경영마인드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평가 일반화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원들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 중장기 교원인력 수급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교원의 배치기준을 현재의 학급 수 기준에서 수업

시수로 변경하는 등 교원 업무를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2007년부터 학교경영 위탁을 통해서 자율권과 책무성이 강화된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인성 개발에 역점을 두는 새로운 학교모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저소득층들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방과 후 학교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넷째로 2008년도 대학입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국립대학 운영 체제를 자율화·다양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대학 특수법 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금년에는 2단계 두뇌한국사업 등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대학에 9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엄정한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상호 연계 운영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서 차관입니다.

김광조 차관보입니다.

정영선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황남택 학교정책실장입니다.

김홍섭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경희 인적자원정책국장입니다.

김정기 평생학습국장입니다.

김화진 대학지원국장입니다.

이병현 국제교육정보화국장입니다.

김은섭 감사관입니다.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입니다.

황인철 재정기획관입니다.

곽창신 대학혁신추진단장입니다.

김용권 비서실장입니다.

심은석 학교정책추진단장입니다.

황지현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장입니다.

김영준 혁신인사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저희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권진수 학술원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나중화 국제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김용욱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입니다.

유명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왕복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원장입니다.

(소속 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워 포인트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정책의 성과와 반성, 2006년 비전 및 중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교육정책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등 우수한 성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2000년에 52.5%였던 대학진학률이 2005년에는 82.1%로 증가하여 고등교육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높은 학업성취도에 비해 학생의 학교교육 만족도는 낮은 편이고, 조기유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현행 학교교육이 다양화·고급화되는 국민들의 교육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하위 1분위와 상위 10분위 간 교육비 지출이 7배나 차이가 나고, 읍·면 지역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대도시에 비해 24점이나 낮게 나타나는 등 교육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세계 200위권 내의 대학이 3개에 불과하고, 대학의 경제 요구 부합도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6년도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 일-학습-삶이 연계되는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학교교육 내실화로 공교육 신뢰 회복 등을 4대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을 통한 사회통합 증진과 동반성장의 기틀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 목표는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입니다.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체제 구축을 통해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책 여건을 보면 소득 상하위층 자녀 간의 수능점수가 30점 차이가 나는 등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만족도가 높고, 평생학습도시도 우수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복지 관련 정부예산이 부족하고 부처 간 연계 부족 등으로 정책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과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금년 3월 농산어촌 1군 1우수교 30개교를 신규로 선정해서 24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전국 88개 모든 군지역마다 1개씩 명문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을 인구 25만 이상 전국 중소도시로 확대하고, 타 부처의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 저소득층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확대하고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1도시 1특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득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취학 전 교육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육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을 8만 1000명에서 14만 2000명으로 늘리고 만 3, 4세아 교육비 지원도 대폭 늘려서 생의 출발점부터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농산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형이 되고 누나가 되어 주는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연간 50만 명까지 늘리고,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금리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대 근로장학금을 연차적으로 증액해 나감으로써 능력과 의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의 음지에 있던 소외계층을 적극 포용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을 포용하기 위해 학교 안팎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고 660만 명에 육박하는 중졸 미만의 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을 실시해서 검정고시가 없이도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병원학교를 2008년까지 전국에 설치하여 장기입원 학생도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여 2010년까지 특수교육 수혜율을 100%로 높ی겠습니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새터민 자녀 교육을 전담하는 한겨레학교 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해 한국어반을 설치하고, 국제결혼 이주자와 그 자녀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지원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은 다양한 교육 양극화 해소 사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교육부에 민·관 합동의 교육격차 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하는 등 추진체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목표인 생애주기별 일-학습-삶을 연계하는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애 단계별로 국민의 직업·진로 선택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 군장병 등 전 국민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고등학교 단계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체제를 혁신하여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체제를 구

축하고자 합니다.

정책 여건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유동성 증대 등으로 생애에 걸쳐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평생·직업교육체제가 요청되고 있고 핀란드, 영국 등 선진 각국은 교육훈련을 통해 국민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국가 수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도가 낮은 수준이고 평생교육 인프라도 미흡하며 실업고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생애설계 지원을 위해 맞춤형 진로정보 제공 등 생애단계별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금년 3월에 구성된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진로교육전문위원회를 통하여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진로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 노동시장 간 이행 정보를 확충하고 학제개편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여 교육과 노동의 연계가 강화되고 국제적 통용성이 높은 보다 유연한 학제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주말 직업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성 고급인력의 전문분야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육아경험이 있는 중고령 여성을 유치원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고, 군 복무 중에도 원격교육을 통해서 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각계각층의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자체 단위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 혁신을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을 변경하여 학교 이미지를 쇄신하는 한편,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디자인고등학교, 자동차고등학교 등 명문 특성화고를 현행 91개교에서 2010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협약학과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44개 협약학과 사업단을 선정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문대 특성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취업률을 제고하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대학별 비교우위 분야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공심화 과정에 대한 학사

학위 수여를 추진하고, 4년제 대학과는 차별화된 학사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전문대학을 평생에 걸쳐 직업 능력을 키워 주는 직업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식기반사회 국가성장의 동력은 대학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제2단계 BK21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양성, 산학협력 실질화, 대학 특성화, HRD의 국제화 등 과감하고 신속한 대학혁신을 통해서 미래 국부창출에 기여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정책 여건을 살펴보면, SCI 논문 수 순위가 1999년 16위에서 2004년도 13위로 제고되었고, 국제특허 건수도 5년 만에 1.8배가 증가하는 등 대학의 연구역량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대학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려대, 강원대, 부산대 등 현재까지 18개 대학이 9개 대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2004년부터 매년 2600억 원 수준 정도로 해서 5년간 1조 3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기업과 산학협력단 제도를 도입하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등을 통해서 신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산업 수요와 연계된 대학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전반적인 인력 공급은 충분하지만 쓸 만한 인력이 부족한 숙련 불일치 현상이 심각하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하며, 전문직 종사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대학 기술 이전율도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미래 국부를 창출할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제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단계 심사를 실시하여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전국 우수 대학원 육성 분야에 143개 사업단, 지역 우수 대학 육성 분야에 76개 사업단, 고급 전문 서비스 인력 양성에 25개 사업단 등 총 244개 사업단이 선정되어서 2900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7개년 동안 총 2조 300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연간 2만 1000명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국제 수준의 지식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법학, 의·치의학, 경영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이번 임시국회에 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만 2008년 3월에 개원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이동통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을 집중 양성하며 신진 교수, 국가 석학 등 기초학문 분야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 특성화를 현장에 착근하기 위하여 대학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등을 통해서 대학의 강점 분야로 특성화하는 한편, 대학특성화지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사전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지표 개발, 고등교육 평가 시스템 구축 등 특성화 촉진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대학 기술의 기업체 이전 및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커넥트 코리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권역별로 15개 내외의 산학협력단을 선정하기 위해 현재 공모 중에 있으며, 선정된 협력단에 대해서는 연간 3~5억 원씩 2010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해 100% 손비 인정을 하는 등 세제 지원을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재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Study Korea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서 2010년까지 5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어교사의 양성·선발·연수 방식을 의사소통 중심으로 개선하고,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WTO DDA, FTA 교육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초·중등 교육은 미개방한다는 원칙을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부산지역에 개소한 APEC e-러닝 연구센터 운영을 통해서 우리의 e-러닝 경험과 우수한 기술을 널리 전파하고 몽골,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을 확대하여서 우리 교육의 해외 진출을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한편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해 중핵대학을 선정 지원하고, 일본·중국의 역사 왜곡 및 독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RD사업의 조사·분석·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HRD 우수 기관 인증제를 공공 부문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인적자원개발 포럼을 창설해서 정례화함으로써 세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어젠다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의 신뢰회복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교육과정 개선, 교수-학습 혁신, 학교교육력 제고, 교육선택권 확대, 교육환경 조성,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여건을 보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 이후 사교육비가 일부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가계부담은 여전히 높고, 또한 주5일 수업제 확대 시행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비만·체력저하 등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교육과정을 수시개정 체제로 운영해서 각계각층의 교육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초·중등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검정제로 전환하는 등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가 월 2회씩 실시됨에 따라서 토요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범사회적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BS 수능강의와 사이버 가정학습 등을 연계하고 EBS 강의의 내실화로 내신 및 논술 수요를 흡수하는 등 e-러닝을 통한 교수학습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과 과학실험실을 확충해서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교원 양성·연수 전 과정의 개편을 추진하고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67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원평가제 일반화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장초빙·공모제를 시범 도입하여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교장으로 영입해서 학교 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원배치 기준을 수업시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행정 인력을 연차적으로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경영 위탁을 통해 자율권과 책무성이 부여된 가칭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개별 학생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과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등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 770개교, 체육관 등 신축 713개교 등 BTL을 통해서 교육시설을 현대화하고, 443개 초·중·고등학교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학 후 3년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내 공기질 관리 등 학교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학생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가속화하여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력 제고, 가칭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 방안, 방과 후 학교 확산, 2008 대입제도의 안정

적 정착 추진,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교원의 직무수행 여건을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 6월에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현재 전국 초·중·고 67개교에서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운영 중이며, 교원 업무부담 경감과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아울러 교원 양성·연수체제 개편안은 교육혁신위의 심의를 마치고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에 교장초빙·공모제에 의해 교장을 선발해서 9월부터는 1군 1우수고, 특성화 중·고교 등에서 전국 51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해서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9월 중에 교원평가 일반화 모델을 개발하고 확대 적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학교 행정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중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칭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 방법의 혁신을 통한 고등학교 교육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가칭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학교경영 위탁을 통해서 자율권과 책무성이 부여된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를 시범 도입해서 학생 개인의 창의성과 인성 개발에 역점을 두는 새로운 학교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 확산입니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또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학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 대입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 대입 제도의 주요 내용은 학생부 표기 방식 개선을 통한 신뢰도 제고와 수능 성적의 등급화를 통한 대입 의존도 완화, 그리고 대입 전형의 다양화·특성화·전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전국 24개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안에 따라서 학생부 반영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 운영체제를 자율화·다양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대학 선택에 의한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 울산국립대, 인천시립대 등 5개 내외의 대학에 대하여 특수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입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2단계 두뇌한국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등을 통해서 대학에 총 9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 재정 지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별로 엄정한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부처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성과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과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업무는 4대 목표와 20개 이행과제, 9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이행과제 수준에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세부과제까지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0개 세부과제에 대해 정책품질관리를 강화하였고, 평가 결과는 직원들의 성과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할 것입니다.

올해 성과지표의 특징은 중장기 성과 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하였고, 교육정책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정량적 지표와 더불어서 만족도 등 정성적 지표를 보완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과워 포인트를 사용해서 업무보고를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조금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개념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자료 요청이라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어서 간사들 간에 한번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만열입니다.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를 참고로 하시고 보고서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설명해 드림으로써 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 및 발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46년 3월에 시작된 정부기관입니다.

그동안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1200여 종의 자료집을 간행하고 두 차례에 걸친 한국사 88권,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와 거기에 필요한 각종 보충 교재를 간행해 왔습니다.

정무직 위원장을 포함해서 정원은 81명이며, 그중 연구직 43명은 대부분 한국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박사 과정을 수료한 이들이며, 계약직 사료연구위원 9명도 석·박사가 되겠습니다.

소장 자료는 고문서와 대마도종가문서를 포함하여 24만 7000여 점이며, 국외 수집 자료는 330만여 장의 마이크로필름 3200롤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 자료 중 대마도종가문서는 국보급의 자료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근대 이전의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만 예산이 없어 간행치 못하고 거의 방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외 문서는 미국, 일본, 러시아, 영국 등의 국립문서보관소와 중국·대만의 각급 당안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수집한 것으로서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그 자세한 수치는 보고서 2쪽에 있습니다.

국내 사료의 수집과 관련하여 2013년까지 전국 3566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역사 사료를 수립·정리하고 구술사 수집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술사와 관련,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시도하고 있지만 저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구술사의 이론과 방법 및 기술을 잘 개발하고 정리해서 여러 기관들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역점을 두고 수집하는 사료 가운데는 민주화운동 자료가 있습니다. 이미 일본·독일 지역에서 수집한 것을 포함해서 국내외의 자료 약 36만 페이지를 수집하여 목록화해서 각급 도서관과 연구기관에 배포했고, 지금은 미주 지역의 한국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문서를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UCLA에 보관 중인 수만 페이지의 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하기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자료에 역점을 두는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라고 자부하고 이 경험을 세계에 보급하여 세계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에 기여하자면 그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제대로 수집·보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작년 12월 20일부터 조선왕조실록을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체로 된 조선왕조실록을 활자체 한자 6400만 자로 바꾸고 표점을 찍는 한편, 번역문 2억 1000만 자를 같이 실어서 세계 어느 곳에서 한자를 모르는 국민이라도 조선왕조실록을 무료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실록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인명, 지명, 사건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인 것으로 IT와 인문학을 접목시킨, 역사 연구에서 일종의 혁명적인 사업으로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본예산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복권기금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뜻있는 국민들이 제 혼자 힘으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국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 만성대동보 그리고 인명, 지명, 제도 등의 역사 사전 등 각종 기능을 부가 서비스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역사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사업이 적극화되자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자료를 편찬·간행하는 데에는 종이책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디지털화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이를 온라인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각 관청의 기록인 각사등록, 최근의 각종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 등 전산화되어 온라인상에 올려놓고 있는 자료들은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책자 1200여 권보다 양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 외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규장각 등 국내의 여러 국사연구기관의 디지털 시스템을 연계하여 한국 역사 정보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그 관문으로서도 국사편찬위원회가 기능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료 기관의 정보 통합뿐만 아니라 국외 사료 편찬 기관끼리의 자료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또 민족사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해서 한국독립운동사의 편찬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사와 재외동포사의 편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방 독립된 지 60년이 넘었고 헌법의 그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역사 계승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안타까이 여겨서 임시정부 자료집 간행을 시작해서 작년에 8권을 간행했고 올해도 8권, 앞으로 50~60권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175개국에 750여만 명의 재외동포가 활동하고 있지만 그것을 역사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있어서 작년부턴 그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자

료를 모으고 편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조선왕조 시절 매일매일의 국가의 기록을 모으고 정리하면서 일지까지 쓰던 승정원·중추원·예문관 기능을 어떻게 계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에서 많은 일들이 하루하루 추진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일지 형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통합적인 기관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몇 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역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단계에 도저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사교육 강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등으로 우리 역사를 탈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은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제가 교육계에 던져지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사편찬위원회는 교육부의 지도하에 독자적으로도 국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군사관학교와 경찰대학, 국립대학의 입시에서 국사 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정원의 직원 채용 시에는 국사 과목을 필수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사능력인증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등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국사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집·보관·편찬하고 있는 자료들은 한국사 연구를 위해 활용되어 왔습니다. 해방 후 국사학계의 연구가 이처럼 발전하게 된 이면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들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독도 문제를 비롯하여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위원회 등 각종 기관과 위원회에서 업무 시작과 동시에 먼저 우리 위원회의 자료를 가져가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국사편찬위원회는 자그맣게나마 공헌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사학계에 제대로 사료로 뒷받침하는 국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과 또 국민의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이런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께서 지금 읽어 내려가신 것을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서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르신 모양이지요? 저희들한테 주신 업무보고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읽어 내려가신 것고는 순서나 내용이 잘 안 맞는 모양이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업무보고 가운데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숫자 같은 것은 이것을 참고해 주십사 이렇게 했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진수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권진수** 학술원 사무국장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우대·지원하기 위해서 1952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정원은 150명이며 현원은 오늘 현재 134명입니다.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비롯해서 임원회, 그리고 11개 분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분과별 전공 정원·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원은 외국인에 대해서 명예회원제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회의는 임원회, 분과회, 부회, 총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술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가지고 있고 모두 18명의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1억입니다. 대부분이 학술원 회원 수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섯 분 이내의 학자를 뽑아서 하고 있는데, 상금은 3000만 원이고 금년도 시상식은 9월 1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이것은 금년 6월 2일 고려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학술대회, 정책토론회는 해마다 한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는 10월 20일, 정책토론회는 11월 10일 개최 예정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예산 7700만 원을 열한 분에게 7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 학술 교류입니다.

외국의 학술원 또는 학술단체 등과 상호 방문을 한다거나 그 단체가 진행하는 학술대회, 총회 등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학문 육성,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학문 관련 도서는 비록 우수하더라도 판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초에 최종 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규 교원소청심사위원장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장직무대리 유명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현황, 그리고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교원에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로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를 향상하는 데 있으며, 기능으로서는 각급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업무와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심사 업무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이 우리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991년 7월 16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개칭 이래 2005년 1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14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설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 기구 및 정·현원을 보면,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5명,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5명이 업무 수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현황과 금년도 예산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청심사 업무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개칭되어 2006년 6월 현재까지 총 소청 접수는 3063건으로 이중 2973건을 처리하고 90건이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소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이는 종전에는 우리 위원회의 소청 청구 대상이 아니었던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소청 대상으로 된 것이 한 요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처리 내용 중 우리 위원회가 취소나 변경으로 인용해 준 비율은 총 처리건수 대비 40.9%가 되겠습니다.

특히 2005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인용은 적고 각하건수가 많은 이유는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중에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건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것을 제외하면 평균 인용률 40.9%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충심사 업무는 2006년 6월 현재로 총 177건 접수하여 전부를 처리완료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업무에 있어서는 2006년 6월 현재로 총 245건이 접수되어 213건이 처리되고 3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 패소건이 특별이 많은 것은, 패소 10건 중 6건이 '재임용 거부'가 처분이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승소한 비율을 보면 73.4%로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다음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배경을 보면 2005년 7월 13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동년 10월 14일 발효됨에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심사업무 종료 시까지이며 심사대상은 75년 7월 23일 기간임용제 도입 이후에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인력은 20인이 교육부 등 수개 기관에서 파견되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사업무 추진실적로서는 2006년 6월 현재 총 309건이 접수되어 180건이 처리되고 129건이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 인용률을 보면 36.7%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하나 취하를 제외한 실제 인용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도 29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 기타사항으로서 예산집행 상황과 작년도 사업 추진 실적 등은 보고를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포함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한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심사 역량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權哲賢 예.

○이경숙 위원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요. 지금 이런 소청심사, 고충심사, 행정소송에서 내용이 뭔지 하나도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아니면 소청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哲賢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것들이 청구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오후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장직무대리 유명규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복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김왕복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김왕복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은 1998년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기관 통폐합 계획에 따라서 1999년 1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로 개편·운영되어 오다가 정부의 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와 각 부처의 자율적 전문교육 실시 기반 마련 의지에 따라서 2005년 1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저희 연수원의 주요 기능은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교육공무원 등의 연수를 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 교육행정직공무원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 교육정책 이해교육과 연수교육 과정의 개발 및 연수 발전에 대한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는 43명의 공무원들이 있고 부서가 총무과, 기획과, 교육과 3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쪽에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3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저희 독자적인 시설이 없이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교육동 4층을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고 2012년도에 대구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교육훈련 실적 및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2개 과정에 98개 교육기수, 토달 인원 7411명을 교육시킬, 연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 교육훈련 비전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하는 창조적 교육혁신 리더를 육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로서는,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적극적 봉사정신 함양,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 육성, 직무수행 전문능력 신장과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조성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 운영체제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기타교육 3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고위공직자 과정, 승진자 및 승진후보자 기본교육 과정 등으로 총 4개 과정에 469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전문교육은 밑에 나열되어 있는 과정을 보시다시피 담당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46개 과정에 4900여 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타교육으로서 학교장 및 학부모의 교육정책 참여 및 대화를 통한 정책이해도 제고 및 참여교육 실현을 위해서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학교장과 학부모에 대한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06년도 교육훈련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의 내재화 및 정부시책 교육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서 변화·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등 혁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혁신의 내재화, 고객 만족 등 가치 공유를 위한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법제 실무능력 강화, 민원·제도 개선 등 시책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조직의 성과 창출·관리를 위한 교육 강화를 위해서 계층별·직무별 핵심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맞춤형 교육의 지속적 확대를 하고 있으며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화단계 직무교육 확대 및 수준별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민간교육훈련기관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교수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습동아리를 내실화

하고 각종 협의회를 통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기관·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지막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성과지향형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수요자가 참여하는 평가체제를 개선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화 국제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진흥원장 나종화** 국제교육진흥원장 나종화입니다.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진흥원은 재외동포 교육, 국제교육 교류·협력,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비 유학생 파견, 그다음에 학생·교원 국외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2년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된 이래 2001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원은 기획관리부 등 4개의 부와 5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4명의 직원이 연간 20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서 맨 먼저 재외동포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국내 초청 교육 및 연수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월 장기, 3개월 단기 과정 등 연간 230~240명의 외국의 우리 동포들을 초청해서 한국어 능력 신장, 한민족 정체성 심화 등의 교과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계절제 교육과정은 재외동포 대학생 춘계학교 등 5개 과정, 370여 명의 동포들을 초청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재외동포 대학생 및 고등학생 1000여 명을 7, 8월에 국내에 초청해서 우리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외동포 교육지도자 초청연수는 70명을 금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CIS지역 고려인 교육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러시아어판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고려인 고등학생 20명을 초청해서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원의 직원들을 현지에서 파견해서 현지 한국어 교원 150명에 대해서 집중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의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육관계자들 30명을 초청해서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외동포 교육 현지 지원입니다.

우리 원의 선생님들이 현지에서 파견 가서 6개 지역 1000여 명의 한국어 교육 담당자들에 대해서 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재외동포용 교과서, 교재 이런 것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주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처음으로 유아용 교재도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국제교육 교류·협력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우리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금년에 40개 국 100명을 초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0명의 외국 학생들이 와서 정부 장학금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로 석사, 박사 등 최장 4년까지 풀 스칼라십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 초청 개발도상국 대학생 30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학부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정부 초청 장학생은 18개 국에서 180명 정도 의뢰가 옵니다. 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의 국제교육 교류 다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 한국어과 대학생 50명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우리나라 중국어과 대학생 30명도 중국에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학생 및 교원 교류는 326명씩 상호 서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요 교류국 동남아시아, BRICs 등 90명의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유학생 문제입니다.

일본 공과대학 학부과정 100명을 선발해서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과 일본이 경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국비 유학생 40명도 금년에 선발해서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연수도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추진하고 금년부터는 해외 파견 교육공무원 선발도 저희 원에서 담당하도록 교육부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12쪽입니다.

제2외국어 독어, 일본어, 중국어 교사 120명을 현지에서 파견해서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어반 지도교사 40명도 연수하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 및 이주여성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민간인 40명도 저희 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명은 현직 교원이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유학 안내 자료, 한국유학 안내 책자, 교육제도 및 대학별 상세정보가 담긴 책자를 금년에 처음으로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우리말 및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될 것입니다. 한국유학 안내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학별 상세정보도 이 시스템에 새로 탑재해서 외국 현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유학박람회를 금년도 8개 나라 10개 도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학정보자료실, 유학 상담과 유학에 관한 각종 통계 이런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외국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나라에 유학 및 국제교류 관계자 40명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시장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Education in Korea)」 6000부를 영문으로 제작해서 외국 및 국내외 기관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제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 국립특수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용욱**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용욱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주요업무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교원연수, 특수교육 정보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1994년 설립된 특수교육 전문기관입니다.

2006년 6월 현재 총무과, 기획연구과, 연수과, 정보운영과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으며 특정직 22명, 일반직 9명, 기능직 9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예산은 2쪽의 내용과 같이 약 46억원입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추진 목표는 특수교육의 발전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학생들의 교육성과 최대화 및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중추적 국립 특수교육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명의식하에 각 과의 주요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연구사업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연구 및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2종의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7종의 기초연구, 5종의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해서 1차 자료 작성을 완료하였고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건의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우수 강사 섭외 및 연구 의뢰를 완료하였고 특수교육 학술지 발간 1회, 각종 협의회와 워크

숍을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원 홍보와 특수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현장특수교육'이라는 책자를 3회 발간하여 교육현장에 제공하였고 홍보자료 1종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세계화 및 국제적 협력을 위해서 OECD 특수교육 분야 회의를 서울에서 11월 말경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한일 공동 특수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해외 특수교육 세미나 참석 및 자료 수집을 위해 최신 특수교육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사업과 연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8쪽에서 10쪽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연수사업은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질 높은 특수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 교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11개 과정의 직무연수와 초등학교 치료교사를 위한 3개의 자격연수 과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2개 과정 145명이 연수과정 운영을 완료하였고 1개 과정 76명의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특수교육 전문직의 전문성과 장학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2명의 연수 대상자를 선발해서 국내 자율연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11쪽에서 1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정보 운영 사업의 목적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특수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 e-러닝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일반 교사와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이버 연수 5개 과정 및 사이버 연수를 위한 5개의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장애학생 교수 학습 지원을 위한 6개의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으며 사이버 연수 5개 과정 1200명의 연수를 완료하였습

니다. 또한 전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와 e스포츠 페스티벌을 9월에 개최하기 위해 현재 지역 예선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원의 혁신 과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은 14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혁신 마인드 제고와 지식 공유를 위한 혁신연수회 월 1회 개최, 원 운영에 대한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제안 공모제,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다면평가제, 개인별 성과를 측정하여 실적에 따라 우대하는 성과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직무성과계약제, 또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인 연구사 1개 시·도 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의 혁신 의지에 따른 변화를 통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은 혁신연수회 4회 개최, 10건의 정책 제안, 원장과 과장·과장과 과원 간의 직무성과 계약 완료, 담당 시·도 업무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있는 청사 신축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원활한 연구·연수 사업 및 특수교육 정보의 접근성과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충남 아산 배방택지 조성지구 내에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지질조사 등 계획된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정보운영과를 자체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인 장애인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3개 과를 정보운영과를 포함한 4개 과로 직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

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첫날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였고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체와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몇 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들과 함께 상견례를 겸한 오찬 자리를 교육위원장으로서 제가 초청을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 오셔서 인사 나누시고 가시더라도 일단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權哲賢**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간사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고등교육법, 수능 부정 시험자들 중 경미한 자들을 구제해 주는 문제를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간에 합의가 되어서 오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10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결정족수 10명이 되면 이 법안을 도중에라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 위원** 김교흥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를 바꾸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전에 교육부부터 해서 각 산하단체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교육의 심각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애쓰신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총리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각 도하 신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요.

지금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명문대 입학이나 또 유학의 발판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4·5학년 정도 되면 외국어고등학교 입시반을 만들 정도로 치열하게 되고 있어서 저는 외국어고등학교의 원래 취지와 다른 것에 대한 정부정책의 발표는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각 광역시권으로 묶는다고 해서 동일계열 진학이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일단 광역시로 입학전형을 시행한 것은 현재는 전국을 모집단위로 하니까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다 외국으로 모으게 되고 그 외국이 전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데 그렇게 수도권에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모았는데 그중에 31%만 동일계열인 어문학계열로 진학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분야로 가니까 대신에 불이익을 입고 아주 고통스럽게 사교육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어서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더 확산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학교등학교는 처음부터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김교흥 위원 거기는 한 73% 정도 간다고 그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과학교등학교는 처음 만들 때부터 외국어고등학교는 다르게 광역자치단체로 모집단위를 제한했는데도 지금 당초 설립목적대로 훌륭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래서 외국도 그렇게 제한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문학계열로 31% 정도밖에 진학을 안 하고 있는데 2008년 대학입시제도는 학생부 반영률이 50%로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외국 학생들에게 불리해집니다. 그런 점 때문에 어문학계열로 가는 사람들은 대신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 외국 학생들 중에 당초 설립목적

대로 어문학계열로 가는 비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일계 전형원칙, 어문학계로 가는 아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지금도 아마 대학별로 조금 차별은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가산점을 조금 더 주게 되면 권역별로 묶는 것보다 오히려 동일계열 진학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외국어고등학교나 과고 졸업생들이 동일계열로 진학할 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전국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이 내년이 되면 82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외고 학생들이 주로 가기를 원하는 대학의 어문학계정원은 4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천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김교흥 위원 물론 4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동일계열 진학자에게 좀더 가산점을 주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권역별로 묶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데는 다른 외국어고등학교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김교흥 위원 예를 들면 인천지역에 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지역의 외고는 중학교 때 150등 정도 해도 갈 수 있는 외고예요. 그러면 인천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일단 선택권을 제한받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에 국제고등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권역별로 묶는 방법보다는 동일계열로 진학했을 때에 가산점 또 동일계가 아닐 때는 감점 이런 제도를 두면 외국어고등학교 본연의 특성을 살리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은 정부가 확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각 대학에서 정할 문제고 실제로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동일계열로 갈 때는 사실상 가산점을 받는 것과 같이

내신에 불이익을 안 받는 여러 가지 장치의 적용을 받아서 들어가고 있고요.

○**김교홍 위원** 그것은 대학마다 비밀리에 진행되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비밀리에 아닙니다.

○**김교홍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공개전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교홍 위원** 내신점수를 굉장히 줄여주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다. 대학별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수능성적에 맞추어서 내신비율을 같이 봐준다는지 특히 2008학년도부터는 정부가 동일계 진학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더 권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김교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김교홍 위원** 저는 부총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여하간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 저는 일단 교육부 정책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효율성의 문제와 또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이것을 2008년도부터 시행하면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이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론을 수렴하는, 피드백해서 여론의 향방을 보고 했으면 이런 좋은 정책들이, 교육부의 올바른 정책들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전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가지고 교육부와 산자부가 서로 인적교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업체에서 고급 인재를 발굴하기 어렵습니다. 대개 고급 인재들은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특히나 디자인 파트라든가 무역의 정통 실무 또는 마케팅 이런 쪽인데…… 산자부에서 1사 1교수 담당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A라는 대학에서 그 대학의 교수들을 공동 풀제로 운영하면서 한 회사에 한 담당교수를 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겠지요. 이렇게 해서 운영되어서 좋은 교수님들의 능력을 회사에 전달해 주고 중소기업을 희생시키고 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논문을 쓴다든가 하면 교수 고과 점수를 매길 때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러한 1사 1교수제라든가 공동 풀제에 참여하는 교수님들께 교육부에서 또는 그 대학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홍 위원** 저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교수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도 시간에 쫓기는 경우도 있고 뭔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과 공단이 산·학·연 클러스터를 할 때……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좋고 또 지금 교육부하고 산자부가 관계 공무원들 교류하면서 산·학·연 클러스터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의 양극화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봅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는……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디자인 고등학교가 제 지역에 있는데요. 거기 학부형, 교장 선생님 이하 각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생들까지 해서 간담회를 해 보니까 정말 듣기 어려운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 지역 내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부형 간담회를 하는데도 서로 수준달 정도로, ‘실업계 학부형이다’ 이럴 정도로 학부형과 학생들 간에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실업계 나온 학생들도 대학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업계고·전문대·산업체 이렇게 연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연계하시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소위 협약학과 제도라는 것으로 저희가 45개 컨소시엄을 올해 시작했구요. 산자부도 비슷한 유형의 산학협력 시스템을 30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도 70% 이상이 바로 대학의 진학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결합시켜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이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 결정이나 전부 문제를 안게 되어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중소기업체 또는 중소기업체를 관리하는 산업단지공단, 전문대학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4개의 기관이 서로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컨소시엄당 몇 억씩 지원을 해서 우선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전문대학이나 취업할 기업체와 협의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직장에 취업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 과정으로 바꿔 주고,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면서 동시에 전문대학에도 진학합니다.

○**김교흥 위원** 그러면 진학할 때 학비도 산업체에서 대 줍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은 컨소시엄별로 중소기업이 절반 부담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사이버 수업, 주말 수업, 방학 수업 이런 것을 활용해서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걸리더라도 직장에 다니면서 전문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4년제 대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들어가면서 자기 직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계속해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와 학교가 계속 연결되면서……

○**김교흥 위원** 맞춤형 교육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을 저희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 운영의 결과를 평가해서 정부가 인적자원 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제 개편 속에 그것을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우리나라의 입직연령은 OECD 국가에 비해서 5살이나 많습니다. 우리는 27살이고 OECD는 22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낮추면서도 평생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방향으로 고쳐 가고자 하는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교흥 위원**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더 구체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외고 이

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입시의 종속변수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도의 새로운 대입 제도를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구체적인 2008년도 새로운 대입 제도를 방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더 좋구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알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김교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오늘 교육부 주요업무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들으면서 또 실제 느낌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책 따로 집행 따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거의 이렇게 잘 수립했습니다. 고등교육 중심으로 좀 편중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왜 정책 따로 집행 따로냐? 여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을 활성화한다’ ‘영어체험마을을 늘려 보겠다’ ‘경기도가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다’…… 그 체험마을에 가서 또 하셨습니다. 자주 부총리께서 바꾸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주요업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청와대라든가 거기서 ‘이거 안 됩니다, 바꿉니다’ 여기에 소신이 바뀌는 것인지 알아볼 길이 없거든요.

또 그다음에 보면 분명히 자사고·특목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입시 통합논술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 있다 보면 이게 또 바뀝니다. 그래서 실망이 있고, 또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 이런 말까지 사설이나 칼럼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을 느끼거든요.

이번의 외국어 고등학교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 제한을 조치하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협의된 것도 아니고, 집행하는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가 없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를 한다 해서 정책이 입안되었

으면 시·도 교육감이 집행하는데 시·도 교육감 나름대로 또 외고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준비하는 데도 있고요. 했는데 이것을 보면 설립은 하되, 아이들을 제한하지요. 제한을 하는 데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중 2학년이 입학하게 되는 이때, 1년 전에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바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의 불안 또 불신 어떻게 보면 울화통 이런 것을 자극해서…… 그야말로 행복한 학교라고 여기 주요업무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행복한 학교가 되겠습니까? 행복한 학생이 되겠냐고요?

이런 뜻에서 하나의 주요업무라든가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것이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시·도가 정책, 주요업무에 대해서 나가는지 이것을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교육부의 존립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8년도부터 거주지 소재 외의 다른 시·도 외국어고 진학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저는 철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분당이나 고양시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에 못 오고 또 서울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가 다른 시·도에는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자기가 ‘내가 저 정도 학교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호해서 선택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가려면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해서라도 가야 되는 이런 사태를 간접으로 보여 줬다는 면에서 이것은 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특목고라든가 외고 설립, 학생 선발을 규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생 선발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이지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현행 시행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시·도 교육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이 방안을 교육감들이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것 들으셨습니까? ‘환영하지 못합니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서울시

교육감이 그렇게 한 것으로 어느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날 바로 또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수정 보도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도 처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그 이후에 따르겠다 하는 것은 뭔가 또…… 좋은 소리를 못 듣겠다 해서 그것은 순순하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서울교육청의 발표 내용은 교육감이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교육감의 진의가 잘못 전달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다만 예고도 없이 기간도 없이 교육부에서 그 제도를 일찍 변경해 가지고 다 준비한 아이들…… 또 주요업무에도 있는데 교육선택권이 있습니다. 교육 선택권이 있는데 지금 평준화 제도에서 교육 선택권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요업무를 이렇게 발표해 놓고 또 어제인가 언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을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과 집행은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서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총리께서는 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따로 말하는 것, 자꾸 반복하는 것, 이것은 정말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언론을 보면 부처를 교육부총리를 포함해서 개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들려요. 외고를 규제하는 것은, 공영형 혁신학교를 그야말로 띄우기 위해서 외고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런 말도 합니다. 교육감과 사전 협의도 없이 2~3주 만에 졸속으로 발표되었다고 지금 보도들을 하거든요.

또 지금 일부에서는 부총리 자신도 자기 자녀는 외고를 나와 가지고 명문 하버드대학까지 진학시키면서 남의 자식은 그런 것 가는 것을 막는다 이래 가지고 막 ‘분하다’ 하는 소리를 한다고 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가 실망…… 정부에 실망하면 또 나라에 실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졸속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지

금이라도 바로 철회를 하고 그야말로 교육 철학이 있고 또 미래를 생각한다면 장관께서 스스로 외교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총괄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먼저 영어마을에 관해서는 제가 말을 바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생각이 똑같은 것이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을 2개, 3개 만든 것은 훌륭한 정책이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만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도 단위에서 975억이나 들여서 하나 만드는 그런 대형 영어마을을 또 만들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경기도의 수원에만 해도 교육청별로 공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많은 빈 교실이 있습니다. 그 빈 교실 한 네댓 개에 1억만 들이면 좋은 영어교습센터를 만들 수 있으니깐 돈을 절약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남은 돈으로 원어민 교사를 좀더 많이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언론에는 선거 때고 그래서 그렇게 전달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김영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가 답변을 다 드린 다음에 얘기하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김영숙 위원 아니에요. 그것 하나만 짚어 나갑시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학교를 가 봤어요. 1억 원만 들이면 빈 교실에서 영어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환경이 되는지 제가 가 봤습니다. 설치하고 있어요. 교실 한 칸을 가지고 또 두 칸, 한 칸 반하는 데 가 봤어요.

그것은 다만 한다고 하는 흉내를 낼 뿐입니다. 영어체험마을에 가면 외국의 도시를 거기다 갖다 놓고 가게, 호텔에서부터 출입국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전혀 다릅니다. 돈 없는 아이들, 저소득층이 그 한 교실 가지고 하는 것 뭘 체험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영어체험마을이라도 가서 외국을 가지 않고서도 외국말 체험하고 외국의 원어민과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장관으로서 아이들에게 줘야 할 혜택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교실에 있는 것은 그냥 보통 교실에서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와서, 제가 언젠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관악구 인현동에 있는 인현중학교, 일명 방과 후 학교로 강감찬 학교라는 곳의 영어교습센터를 한번 가 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압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어느 언론에 영어마을에 관해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가 그 영어교습센터에서 원어민 교사와 자주 만나서 얘기하면서 얼마나 영어교육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쓴 글이 발표된 것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학교에서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서울시내 애들이 거기 다 어떻게 수용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주장을 다 하셨으면 제 말씀 좀 들어 주시지요.

○김영숙 위원 저는 들으면서 말씀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를 들면 수원의 영통구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는 임대 아파트가 안 들어선 관계로 한 10년 동안 31개의 교실이 남습니다. 그런 지역에 수원시가 따로 영어마을을 지으려면 땅 구입하고 이러는 데만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교실이 남으니까 그 교실을 이용해서 하면 훨씬 비용을 덜 들이고 영어교습센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좋은 선생님과 만나서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영어마을을 아무리 잘 투자해서 만들어도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해야 그저 8박9일 정도인데 일반 학생들은 70~80만 원 돈을 들여야 하고 한 시간 반 걸려서 가서 거기에……

○김영숙 위원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저는 학교 단위에 있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단위는 교육 과정이 돌아가니까 있어야 되고 또 전체 아이들이, 서울 애들도 같

수 있는 큰 디럭스 같은 장소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도 김영숙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김영숙 위원 체험마을입니다. 영어교실은 학교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의 반대는 아닙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런 체험마을은……

○김영숙 위원 제 말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김영숙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경기도가 영어마을을 지은 것을 정책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요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모두 다 영어마을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김영숙 위원 모두 다 만든다고 그러면, 개수가 많으면 그것은 다소 조정은 되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도에서 만들어 놓은 3개 정도면 모델로서는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제발 학교에 좀 만들어 달라……

○김영숙 위원 그러면 시·도 간에 균형적으로 영어체험마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김영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부총리 답변 중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위원입니다.

제가 직전에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살벌하네요.

먼저 제가 오늘 첫 상임위원회니까 일단 간단한 소회 두 가지만 지적하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인적자원부 출석자 명단을 죽 봤는데요. 제가 한자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중에서 간부들 존함을 제가 읽지 못하는 한자

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한글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직전에 제가 있었던 상임위에서는 이게 항상 한글로 나와서 제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가 교육위원회 행정실과 협의해서 두 개를 다 표시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인적자원부 간부님들 죽 앉아 계시는데 의외로 여성 간부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인적자원부인데, 국가에서 여성의 자원이 우리의 경쟁력이고 미래를 좌우하는 것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성에 대한 내부적인 자원 구조를 전향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뒤에 계신 우리 여성 간부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세 분은 그럼 과장급이신가요?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기획총괄담당관 실서기관 최은희 아닙니다. 서기관입니다.

○안민석 위원 서기관이시고요. 또……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정책국정책총괄과사무관 김문희 저희 둘은 사무관입니다.

○안민석 위원 과장님은 아직 안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 교육부에서 국장급은 아직 여성 국장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여성부를 제외하고는 전 부처에서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의 주무 과장들이 대체로 다 여성 과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관은 30%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집하는 교육고시, 그러니까 행정고시 교육직으로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면 2005년에 10명을 할애받아서 10명을 모집했는데 10명이 다 여성으로 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성으로 한 부처에 모두 합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남자만 따로 셋을 뽑아야 할 정도로 지금은 여성의 비율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

요.

앞으로 더욱 더 국장님급에서도 여성 국장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마 여성국장이 분명히 나옵니다.

○안민석 위원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니까 타 부처에 비해서 출선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제 나름대로 의정활동의 슬로건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정했습니다.

지금 앞서 두 분의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의는 가급적 피했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정말 상위 1% 정도밖에 속하지 않는 이 학생들에 해당되는 학교가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큰 관심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겨울에…… 제 가까운 친구의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외고를 보내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어느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시키는 전문학원에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집에 밤 12시 넘어서 들어옵니다. 아마 수업이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외고를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학원 비용이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토익·토플반이 따로 있는데요, 왜 중학생들이 토익·토플을 해야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씩의 영어과외비를 댈만한 집은 어떤 집이나, 적어도 중상위 계층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외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상류층 집안의 자녀들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고라는 독특한 학교 형태가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해 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외고의 운영 방식, 외고 학생들의 장벽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 온 지 아직 얼마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스티디한 다음에 정기국회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교육부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놀 수 있을까, 잘 뛰어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이것이 선진국형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서는 미국이나 일본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처럼 그렇게 사교육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대체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입시제도도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선진국 학생들과 저희 학생들과 가장 큰 차이가 하루에 얼마만큼 운동을, 신체활동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 차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들이 3시 정도에 마치면 자기들끼리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집에 가고요. 작년에 제가 일본의 몇몇 고등학교를 가봤더니, 저는 일본의 입시교육이 우리처럼 치열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거기도 고등학생들이 오후 4시 정도에 마치면 과외활동이라고 그래서 4시부터 6시 정도까지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7, 80%가 그런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과외활동을 하고서 집에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들의 비만 문제라든지 체력 문제가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육인적자원부 보고 자료에도 나왔던데 10대 청소년들의 체력이 40대 아저씨들보다 못하고, 또 한·중·일 체력 비교를 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의 체력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체력이 가장 떨어집니다.

청소년들이 국가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

리 국가경쟁력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체육은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7차 과정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목 중에서 체육 과목이 필수이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29개 국 OECD 국가를 조사한 것인데 19개 국 응답한 국가에서는 전부 다 필수이고요. 10개 국 미회신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먼저 담당자께서 OECD 국가들 전체 29개 나라 중·고등학교 체육교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필수인지 선택인지 이 자료를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BTL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여야 의원님들 몇 분하고 일본 학교의 BTL로 지어진 건물들을 죽 시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그리고 대안을 장관님께도 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학교의 예산도 부족하고 지자체 예산도 부족하니까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학교 안에 복합시설을 짓는, 그리고 그것을 BTL 제휴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하기를 지난해에 건의했었는데 이것이 아직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쓰십시오.

○**안민석 위원** 자료를 보니까 4개 학교가 BTL 복합시설 시범학교로 되어 있던데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학교들을 BTL 복합시설로 선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저한테 보고할 때 따로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것이, 제가 어젯밤에도 그동안 교육 자료들을 봤었는데 오늘 교육부 자료도 그렇고, 아마도 교육부의 인식은 교육개선 조치 이후에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있다는 그런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현실에서는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아우성친다고 난리인데 교육부에서는 2년 전의 조치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러한,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착

각이 왜 생기는지 제가 좀 꼼꼼이 따져 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은 사교육 때문에 이 고통에 엄청나게, 여전히 가면 갈수록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결코 교육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신 위원님들은 멀리 가지 마시고 안에 계시든지 근처에 좀 계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현 위원** 이군현입니다.

우리 교육부총리님께 조금 사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교 제한의 논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따님이 외교 나온 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리고 대학은 어떤 학과를 갔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연세대학 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이군현 위원** 제가 대학을 묻는 것보다, 과를 경영학과를 갔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이군현 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장관님 생각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이 문제가 있다기보다 저희 딸애의 경우에는 당시 외교가 전국에 14개밖에 없었던, 비교적 지금보다 상태가 좋았던 시기에도 비교적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이군현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외교를 나왔는데 경영학과를 가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런데 그러려면 왜 외고를 만들었을까, 외고를 만들면……

○**이군현 위원** 아니, 외고가…… 외국어라는 것이, 지금 글로벌 시대에 하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를 물론, 문학이나 언어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모든 전공을 넘나드는 하나의 수단이고 국제화 시대의 도구라고 봐야 되지……

그래서 외고의 학생 선발을 지금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을 권역별로 제한하겠다, 그 이유는 외고 졸업생의 31%만이 동일계열로 진학하기 때문에, 외고의 문제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오히려 외고 나온 아이들이 일반계, 인문계나 하등의 다름 바가 없는데 단지 외국어를 그 학교에서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수 단위 수가 더 많다고요.

마치 우리가, 전국의 17개 되는 과학고가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이랑 똑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수학이나 과학을 좀더 심도있게 하고 이수 단위가 조금 높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외고 나왔더라도 상대나 범대로 얼마든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2008년도 입시제도를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의 중심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학교 생활기록부의 반영률을 50% 이상 높이는 것으로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또 대학이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군현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런데 현재도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어문계 이외로 가는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군현 위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내신의 불이익을 극복해야 되니까요. 전국에서 모집한 우수한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모여 있으니까, 각각 자기 지역에 있는 평준화 학교를 들어갔더라면 다 1등급, 2등급 받을 학생이 외고에 가면 4등급, 5등급밖에 못 받으니까 내신의 불이익을 극복하

려면 대학별고사라든가 다른 데서 점수를 더 많이 확실하게 보장받고 따라 되니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수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또 많은 돈을 내서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적용 못 하는 일부 학생들은 자퇴를 해서, 내신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자퇴하고 대입전형 시험을 봐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인정받으면 수능시험 본 것과 비례를 맞추어서 한 3등급이나 2등급은 최소한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식의 비교육적인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군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런 학교가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은 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외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모집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했다라면 외고가 전국에 고르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을 모집단위로 하니까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생겨 가지고 과고는 전국에 고르게 있는데 외고는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시정하기 위한 그런 고민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권역별로 학생을 뽑게 되면 외고 졸업생들이 어문계열 외의 학과로 가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니지요. 이제……

○**이군현 위원** 지금 전국 단위로 뽑던 것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가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대안인 공영형 혁신학교를 만들면서 지금 상태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무려 110개의 우수학교를 만든다는 공약을 지자체장들이 내셨는데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외고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과잉되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이런 외고가 또 100여 개 만들어지면 그때는 견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로 될 것이다, 그때는 2008년도 입시제도는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혁신학교 형태로 좀 수요를 흡수하고 그리고 외고도 앞으로 균형있게 전국에 고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집

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군현 위원 예, 그런데 기존에 이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완 정책으로 일단 외고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설립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외고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금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것을 외고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형 혁신학교의 도입 성공을 위해서, 지금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학생모집 제한을 한다는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외고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정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지금 이런 반발을, 예를 들면 학부모 또 외고 교장, 실제 설립 운영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는 교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또 충분히 논의도 하지 않고 강행하려고 함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물의가 빚어지고 있잖아요. 또 교직원들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제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좀…… 정책이라는 것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측을 할 수 없는 너무나 졸속적으로, 너무나 급하게 하는 정책의 변경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충분히 제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 우려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제가 전체를 좀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를 공영형 혁신학교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초·중학교만 의무교육이 돼 있지만 고등학교도 지금 현재 사실상의 의무교육, 보통기관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를 공영형 혁신학교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대학이나 민간단체 이런 데다가 협약을 해서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잘 못했을 때 이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책무를, 그 협약을 맺은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길 소지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첫 번째는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민간단체나, 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어떤 단체에다가, 민간단체에도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교육을 위탁시켰을 때 생기는 문제 이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이 학교 운영 주체를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민간에게 개방했을 때 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교장이,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이제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판에 교육의 전문성이 굉장히 훼손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염려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민간단체하고, 제가 염려하는 것이 주로 민간단체인데요. 제가 볼 때 대학 같은 데 하고는 교육을 해 오고 있는 기관들이니까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민간단체하고 했을 경우에, 이 협약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해 가지고서 변경하거나 또는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을 단절하겠다 이런 정부의 방침을 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제대로 안 했을 때 중간에 스톱이 되면 결국은 피해자는 학생이 되거든요.

교육의 연속성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학생에게 오는 피해를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공영형 혁신학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해 보는 시도 자체, 발상이나 취지 이것은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지금 현행 우리 평준화 제도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염려했던 그런 한 네 가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 또 우려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혁신학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구체적인 우려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모델의 혁신학교를 내년에는 많아도 10개 이상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영 주체의 이념 편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걸러서 적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협약을 만들 때 인가권자인 교육감이나 또는 국립대학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협약 당사자가 되는데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협약, MOU를 체결하고 그것을 어떻게 검증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도 미리 협약을 정해서 매년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를 거치고 또 4년마다 한 번씩 종합평가를 해서 책무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지만 못한 경우에는 인사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응한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정능력에 관해서는, 이 혁신학교는 다른 고등학교와 똑같이 지원을 중앙정부가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되 다만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 학교를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들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1년에 한 5~10억 정도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내면 지자체의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큰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2011년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검증하고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한 뒤에 2011년에 선정될 그런 혁신도시에 배치할 혁신학교를 한 20여 개 하면서, 그때는 충분한 이런 것들이 다 검증된 그런 제도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이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입니다.

장관님, 축구경기하고 교육정책을 비교한 것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축구경기하고 교육정책의 공통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축구경기와 지금 교육정책이다, 그리고 축구경기와 교육정책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 일가견이 있어서 다 무슨 이야기를 한 5분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이런 관심사가 이렇게 많은데 축구경기는 하나로 국민들이 모아지는 것에 비해서 교육정책은 이해관계 집단마다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참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한 한 이것을 하나로 모아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의 교육정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축구경기는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가 있는데 이 교육정책의 지금의 구조는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좀 새겨들어서 앞으로 정책을 세우는 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나온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영형 혁신학교라는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딱 뭐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정책이 교육평준화를 정말 기본으로 하면서도 또 다르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덜 성숙되어서 나온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정책은 평준화가 기본이지요. 그런데 평준화가 기본인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것이 나왔는데 잘못하면 평준화를 흔드는 어떤 정책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는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토론 끝에 혁신학교의 모집단위를 철저히 다른 학교와 똑같이 평준화 지역은 학군 내에서 선지원, 또 비평준화 지역도 다른 비평준화 지역 학교와 똑같은 방법으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모집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혁신학교는 현재의 평준화 정책의 틀을 분명히 지키고, 모집단위가 똑같으니까, 다만 전국의 모든 학교를 다 이와 같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또 그렇게 하려면 전 교장·교감 승진임용 제도를 비롯해서 교육체계 전체를 뜯어고쳐야 되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학교를 해서 그 성과를 피부로 느끼게 한 뒤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몇 가지가 우려되거나 좀 불분명한 게요, 일단은 소유는 공영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소유하고 경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게 벌써 외부에다, 민간에다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운영을 민간에게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소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영인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물론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이경숙 위원 그러면 운영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소유뿐만 아니라 비용의 조달도 물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경숙 위원 우려되는 것이, 운영경비를 보니까 지금 안에 따르면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의 개념이 민간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민관이 자본을 투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가는 곳에 대해 운영이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학교 교육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 여기에다 잘못,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로 많이 맡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자율이라는 것이 맡은 좋지만 어떤 뚜렷한 것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이외에는 자율로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율의 내용이 또다시 입시 위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서 지금 입시 위주로 가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립형 사립고도 그렇지요, 지금 외교도 완전히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또 그렇게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고 만약 그 내용이 정말 바람직하다면 21세기형에 맞는, 지금 제도교육이 못 하고 있는 창의적인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대안적인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닐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향하는 가치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자율로 맡겼을 때 이것은 평균화의 골격을 아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먼저 재정에 대해서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현재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100%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거기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앞으로 2011년 이후 만들어지는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이전해 가고 그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전되는 공공기관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율로 하더라도 MOU를 통해서 교육방법, 교육과정, 내용들을 인가권자인 교육감이나 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혁신학교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방법과 목표는, 우리의 교육방법은 대안교육 형태로 하되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일반화하려면, 모델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려면 대안교육의 원칙에만 충실한 그런 방법으로는 일반화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교육 방법으로 하되 그것이 입시에도 결코 불리하지 않은 형태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사교육에는 의존하지 않고 학교에서 충분한 토론식 수업, 문제 해결 능력 위주의 수업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10과목을 고1 때 가르친다는 제한 외에는 그 공통기본교육과정도 시간을 자유롭게 선생님들과 교장이 협의해서 짤 수 있어야만 그 운영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모든 학교는 그런 자율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부여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요, 협약이라든가 평가가 있겠지요. 그러나 처음에 단추를 잘 꿰매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협약을 맺고 나중에 교육 평가를 하더라도, 이렇게 외국어고가 잘못된 것을 시정

할 때 굉장히 사회적인 소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아주 주요하게 했던 평준화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준화하고 비평준화 지역을 연구한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개발원에서 평준화 지역이라고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어 고등학교, 자사고, 또 공영형 혁신학교가 평준화를 흔드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고요.

지금 시간이 다 갔는데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자료를 이렇게 갑자기 주면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내용을 보니까 성폭력, 성추행에 관한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보고를 할 때 어떤 영역들에 심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됐는가,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소청심사가 많은데 보니까 심사위원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124개 교를 했는데 한 94개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 보고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대책이나 처리에 대한 원칙을 세우셨는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오늘 오후에 발표된 내용은 중간발표이고 아마 최종발표는 9월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처음 결과를 알았는데 앞으로 감사원 감사가 나오면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를 할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교육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권을 현재 지방교육청의 감사체계, 조직하고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좀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내용이 교비 횡령, 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 재산 임의처분, 교직원 채용 비리,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등 250여 건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보고를 받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중에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에 대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이경숙 위원 오늘 보고가 안 됐는데 이 부분도 안이 짜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5시21분)

○委員長 權哲賢 다음은 이주호 위원님 질의순 서입니다마는 긴급한 법안을 의결할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구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하고 달리 별로 위원님들을 찾지 않아도 의결정족수를 충분히 넘겨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출발이 상당히 좋은 것 아닌가 싶은 기분이 듭니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수능 부정행위자가 38명입니다. 현재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동 법안을 법안심사소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동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고, 또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임시회기 중에 시급하게 처리가 요구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 법안을 전체회의에 이관해서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

표발의)(김정훈·엄호성·유승민·윤건영·박세환·김기현·임해규·이혜훈·박형준·박재완·이인기·이근식·고조홍·최구식·이계경·전여옥·안상수·고경화·이성권·이재오·신국환 의원 발의)(계속)

○**委員長 權哲賢**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유기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수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함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유형을 조직적 부정행위와 단순한 부정행위로 구분하고 조직적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 무효와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단순한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만 무효로 하도록 해서 제재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조직적이냐, 단순하냐로 구분해서 제재를 차등화하는 것보다는 휴대폰, mp3와 같이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반입하는 등 사전에 수험생들에게 공지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그치는 경우와 다른 부정행위를 구분하여 그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차등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되어서 이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제4항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연도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되, 동항에 단서를 신설해서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당해시험은 무효로 하지만 응시자격은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38명이 대개 이렇습니다. 핸드폰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가방 속에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mp3를 소지했다든지, 시험관

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든지 하는 단순한 유형인데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로 부령에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안 제34조제6항 및 부칙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유기홍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71조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1인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경숙 위원** 재청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기홍 위원의 수정동의는 위원회의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기홍 위원이 제안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홍 위원이 제안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기홍 위원이 제안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법안의 자구 정리는 관례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육인적자원부(본부)

나. 국사편찬위원회

다. 대한민국학술원

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마. 교육인적자원연수원

바. 국제교육진흥원

사. 국립특수교육원

(15시28분)

○**委員長 權哲賢**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저도 외국어 고등학교 문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총리께서 지난 19일에 발표한 방침에 몇 가지 중요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비롯한 특목고의 학생 모집 권한이 교육감 소관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다.

○**이주호 위원** 이렇게 바뀐 것이 몇 년도부터인지 아십니까?

2001년부터입니다. 2001년 한완상 부총리 시절에 바뀌었는데요. 이때 취지가 “학교 단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교육감에게 이양된 권한을,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의 시계를 5년간 거꾸로 돌려서 다시 빼앗아간 그런 식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육감한테 맡겨 둔 권한에 대해 침해를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서 교육감들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외국어 고등학교가 지금 전국에,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설립되었고, 그것이 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많이 설립되었고, 16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는 아예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교육정책, 특히 2008년도 대학입시정책을 모처럼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실천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교육감들과 한번 협의를 하고 외고의 설립을, 이미 외고가 많은 지역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정부가 마침 그 대안으로 공영형 혁신학교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함께 정책을 전환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주호 위원** 그런데 학교에 자율을 주는 권한을 지방자치에 넘길 때는 자율적인 학교, 또 학

부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학교 선택권에 대한 결정이 시·도 단위로 이루어져도 충분히 괜찮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넘겼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외고의 설립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외고의 대부분이, 특히 서울지역에 소재한 6개 외국어고는 다 사립학교라는 것을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이주호 위원** 그것은 다 사립학교들입니다.

지금 계속 과학고랑 균형을 맞추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의 설립에 대해서 정부, 특히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사실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사실 부총리가 되시기 전의 평소 지론이 선택권의 확대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권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지자체가 외고를 비롯한 학교선택권을 가진 학교들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자꾸 관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자체에 부여된 권한이 전체 교육정책과 균형을 잘 이루어서 운영되면 뭐하려고 정부가 욕을 먹어가면서 또 제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전반적인 교육정책상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지자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그때 위임하면서 시행령에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설립을 하거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저는 외고의 경우에는 그때 시행령을 만들면서 그런 조항을 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전국에서 모집을 하는 학교가 어느 특정지역에만 많이 생기게 될 때 따르는 문제도 다 생각하려면 전국을 다루는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주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학교선택권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좀 많아져야 되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교육감한테 넘긴 것이거든요. 선택권을 그 지역

에 얼마나 많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굳이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교육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충분히 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의 이 조치가 소위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5년 이전으로 다시 되돌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외국어고등학교는 과학고와 달리 대부분이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침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사립학교도 있고 공립학교도 있습니다만, 외고가 과학고에 비해서 사립학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인 외고의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일정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이주호 위원** 지금 서울 소재 6개 외국어고교의 재정상황을 보니까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시설비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호 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어고가 6개교 있는데 국가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학생들의 선발에 대해서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제한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 사립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를 모았는데 국가의 다른 교육정책, 즉 대학입시정책과 관련해서 대다수의, 한 70%의 학생들이 내신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심지어는 외국어고등학교에 다니다가 2학년 때 자퇴하는 학생도 있고……

○**이주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세 번째로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방교육자치를 침해하셨고, 두 번째는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또 침해하셨고, 세 번째는 학부모의 선택권한을 침해하신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대입의 여러 가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외고……

지금 부총리께서도 그렇게 선택을 하셨지 않습

니까? 그렇게 선택을 한 데는 외고가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학부모의 선택을 다 도외시하고 국가가 이것은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꾸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학교들을 선택한 학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부총리께서 학교선택권에 대해서 강조를 해 오셨던 것은 아마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충분히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소신을 바꾸셔서 외고에 대해서 근본적인 침해를 하시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이 학교에 지금 다니거나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물론 선택권을 침해받거나 제한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어느 외고, 특히 자기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지 않은 외고에 가려고 준비한 사람들의 기대이익을 침해했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요.

○**이주호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런데 그 기대이익을 침해한 문제와 그대로 두었을 때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 자체가 사회적 합의대로 학생부의 반영률을 50% 높이는 정책을 실현하기에 도저히 어려울 정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정책적인 것 2개를 비교형량하면 저는 이번에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을 기왕에 외국어고등학교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좀 자제하고 되도록 그런 수요를 혁신학교 쪽으로 흡수하고 모집단위도 과학고등학교와 같이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는 조치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했고 더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호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부총리님, 지금 계속 대학입시를 말씀하시는데 그 대학입시라는 결국은 뭘니까?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하는, 또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대학입시의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학생의 선택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입시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교육문제를 교육부총리께서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학부모들한테 강요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한테 강요할 뿐만 아니고 학교들한테도 다 강요하고 또 심지어는 지금 교육감들한테까지 강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교육정책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에 자율이 필요하고 선택이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은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교육에 대한……

○이주호 위원 동의하신다면 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이런 졸속적인 정책을 갑자기 발표해서 가지고 모든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러나 교육감들에게 부여되었던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인가권이나 자율적인 운영권이 다른 교육정책의 목적에 비추어서 도저히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체 교육정책의……

○이주호 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데 교육부총리 혼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밀어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충분한 공청회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외국어고등학교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의견 개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상당수가 내신의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더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호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학부모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 제가 말씀드린 지적이고요.

이런 학부모 선택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한번 이렇게 자율을 존중한다, 선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섰으면 일관되게 즉 정책을 추진하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5년 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전체적인 공교육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저는 그런 지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호 위원 공교육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선택을 더 넓히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말

씀대로 학부모들의 선택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대학입시제도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뽑게 내버려둔 결과 얼마나 많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이주호 위원 사교육의 문제가 대학입시를 자율적으로 맡겨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대학입시제도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사회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서 대학입시제도를……

○이주호 위원 제가 좀 정리발언을 하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의 외교에 대한 부총리의 발언은 정말 무책임하고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자치를 5년 거꾸로 돌렸고요, 학부모의 선택과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부총리께서 답변하고 싶으시겠지만 보충질의 때 또 한다면 그때 모아서 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委員長 權哲賢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최순영입니다.

교육부총리 및 실·국장께서는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혁신위에서 교장초빙·공모제가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교장초빙·공모제를 포함해서 교원제도 개선은 교육부가 교육혁신위에 안을 위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위의 교원정책특위에서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 위원들이 합의한 안이 부결되어서 특위 위원 7명이 사퇴하는 파행을 지금 현재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모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는데, 아마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은 계속 자료도 나오고 등등

해서……

그런데 교육부가 혁신위의 최종 안이 나오기도 전에 자신의 입장을 혁신위에 통보하는 것은 교원승진제도의 개혁과제를 혁신위에 위탁한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은 좀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작년 11월에 소위 초빙·공모형 교장제도에 관한 교육부의 안을 만들어서 혁신위원회에 주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혁신위원회가 교원단체들과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달라고 혁신위원회에 작년 11월에 이미 공개하고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제안한 것은 알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런데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들끼리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혁신위원회에서 참고하기 위하여 스물세분의 각계 특위……

○최순영 위원 압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 봤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특위 위원들을 모아서 스물세 분의 위원 중에서 열 분이 합의한 합의안을 가지고 스물세 분의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 관하여 교총에서도 굉장히 심한 강도로 반대를 하시고 전 교조에서도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투표하기 전에 우리 교육부가 제출한 안을 한번 같이 참고를 해 보시고 투표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자료가 배포됐을 뿐입니다.

○최순영 위원 지금 현재 교육혁신위 안과 교육부의 안이 업무보고서 8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장초빙·공모제와 혁신위의 교장 공모제와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차를 두고 먼저 교육부의 안을 실시한 뒤 교육혁신위 안을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교육부의 안은 우선 현행법을 고치지 않아도 현행법 테두리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이번 2학기에 51개 학교, 내년에 100개 학교,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혁신위원회 본회의에서 특위 안을 수정하든지

또는 혁신위원회에서 다시 만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 물론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그것은 현재의 여러 가지 관련 법을 고쳐서 새로운 제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교육부가 내세우는 교장초빙·공모제는 혁신위를 사실 무력화시킨 것이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지 않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그렇게 되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닙니다. 그 방향은……

○최순영 위원 어차피 있는 그대로를, 그 제도를 두고 거기에서 변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닙니다. 교육부의 안이나 혁신위 스물세 분 중 열 분이 합의한 안이나 방향은 똑같이 현재의 초빙교장제를 개선해서 공모형 교장제도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그것을 좀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혁신위 특위에서 합의한 안은 아예 처음부터 2개의 그룹, 두 트랙으로 확실하게 나누어 가지고……

○최순영 위원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한꺼번에 전국의 삼백몇십 개 학교에서…… 최소한도 삼백몇십 개 학교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학교에서 동시에 시행하자는 것인데요.

그것은 전국의 40여만 선생님들이 5년, 10년, 20년씩 지금의 교감·교장 제도의 틀 속에서 교감·교장이 되기 위해 쌓아왔던, 가점을 받기 위해 시범학교 운영도 하고 벽지학교도 갔다 오고 고3 담임도 맡고 하면서 고생하면서 교감이 언제 쫓 될 것이라고 했던 기대이익을 너무 크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총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최순영 위원 글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혁신위 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자는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부는……

○**委員長 權哲賢** 잠시만요. 의사진행 중에 제가 잠시 끼어들겠습니다. 최순영 위원님한테는 시간을 더 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다가 느낀 것인데요. 김진표 부총리께서 최근에 실력이 많이 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자꾸 많이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행간의 뜻조차 알아내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해 주시고, 다 듣고 나중에 모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죄송합니다.

최순영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최순영 위원** 만약에 지금 부총리의 말씀대로라면 혁신위 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원체 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 혁신위에 그런 여러 가지 안을 올렸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특위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자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 틀을 깨지 않고 또 변형을 하자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혁신이 될까, 이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과 후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방과 후 교육은 사교육 대책을 위해서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 간의 여러 가지 교육복지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대책인데, 문제는 방과 후 학교가 학교의 학원화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지요?

지금 현재 대도시 지역에서는 질 낮은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반면에 사실 농어촌에서는 강사들이 부족해서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

는 것이, 방과 후 교실이 과연 큰 효과를 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형 교장 승진제도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지금 시범 운영을 하지만 혁신위에서 좀더 다른 안이 만들어지면 혁신위 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방과 후 교육……

○**최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혁신위 안이 다시 나오면 그대로 같이 여기에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물론입니다.

다음에 방과 후 교육에 관해서는 학교의 학원화를 우려합니다마는, 그것을 최소한도로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학습지 회사의 학습지를 쓴다든지 학원이 직접 위탁받아서 경영하는 일은 금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방의 경우에 다소 우수한 강사를 모으기가 어렵고 해서 인접한 도시의 학원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한꺼번에 없앨 수 없는 상황에서 가난한 학생들, 또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도 아주 적은 돈으로 방과 후 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최순영 위원** 지금 현재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 관련 출판사에서 방과 후 학교 진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은 방과 후 학교 시범 운영 단계부터 철저히 금지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것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학교가…… 학교에 사교육을 끌어들이게 된다는 여러 가지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과 후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되어서 법률적 규정이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교육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방과 후 아동·청소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리다 보니까 사실 이로 인해서 예산 낭비와 사업의 집중성이 결여되고 있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

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그런 문제를 정부에서도 느끼고 기획예산처에 방과 후 교육, 특히 초등에 있어서 보육·교육에서 겹쳐지고 중복되는 분야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단을 만들어서 조정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잘 조율해서 일원화하도록 저희가 인적자원개발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을 총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서 예산과 집행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처럼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을 배정할 때 조정을 해 주어야 되니까요.

○최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다면, 또 사교육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면 방과 후 교육은 무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교육재정이 넉넉하면 그랬으면 더 좋을 텐데…… 일단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되 농산어촌 지역은 지금도 정부가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저소득 계층, 그다음에 후년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정부가 바우처 제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순영 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방과 후 공부방이 단순하게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맞벌이들한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관을 해 주는, 방과 후에 돌봐주는 이러한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 공부방은 오히려 그런 자치교육, 문화, 특기적성,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지금 현재 계속 외고 문제를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의미에서……

특목고의 동일계열 진학을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특목고 같은 경우에 처음의 취지가 그야말로 특기적성 목적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변형이 됐다는 것이지요, 입시 목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를 지방 단위로 한다는 것은 제기 보기에 근본적인 원인 치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광주, 충남, 강원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도 또다시 외고를 하나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외고가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외고를 설립하는 것을 저희는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외고 정책……

○최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막는다고 그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니, 제가 막을 생각이 없고, 그것은 동의해 주려고 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계속 더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사교육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 취지, 근본 취지와는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본 취지를……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서 특목고 동일계열 진학 방침을 교육부가 2008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최순영 위원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번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강력하게 정책을 내세워서 오히려 동일계열 진학이 아닐 때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문제는 금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외고생의 31%만 동일 어문학계열로 진학하고 있는데 나머지 70%를…… 사실은 지금도 내신의 불이익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더 불이익하게 만들거나 하는 것은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보다는 10배 이상 더 강도 높게 학교선택권을 제한한다든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장학지도를 통해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비어문계열로 진학하기 위해 비

정상적인 사교육에 의존하는 또는 사교육과 같은 대학입시 교육을 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감들과 협의해서 장학지도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2008년도부터는 동일 어문학계열로 진학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특전을 주겠다고 하는 특별전형의 원칙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이것을 수용해서 다양한 전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위원** 어쨌든 간에 2008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던 부분을 더 보완해서 토론을 더 거쳐서 준비해 나가실 때 오히려 교육의 평준화, 교교의 평준화 틀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최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성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고에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학교설립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진작 세워져야 될 학교들이 오히려 뒤늦게 계획이 잡혀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에서 꼭 챙기셔야 됩니다.

(권철현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뭐냐 하면 학교설립계획을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분리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의 학교설립계획을 보면 학급당 39명 정도를 기준으로 짠 것입니다. 그래서 BTL계획도 낸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39명 선에 맞춰주면 자동적으로 30명 초반 선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2010년 중반입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아이들이 감내해야 될 과밀교실이라든지 좋지 않은 학습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부에 두 가지를 주문했었습니다.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에 조용한 교원수급계획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 학교설립계획을 교차해서 짜라고 제가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부 행정이 구체적이질 않습니다. 디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이것을 자연발생적으로 감소하는 시점을 기다려서 학급당 학생 수를 39명 기준으로 학교설립계획을 짜는 이런 후진 행정은 하지 말고 교차분석해서 계획을 짤려면 좋겠고 수도권하고 지방을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수업시수를 지표로 교원수급계획을 짠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정교한 통계도 내시고, 작년에 2005년 10월까지 교원수급계획이나 이런 것을 측정해서 저한테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듭 강조드리고요.

외고 문제가 나왔는데 외고 문제나 자사고 문제, 평준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원인이 저는 대학서열화하고 학벌중심사회가 근본적으로 지나치게 작동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입시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사회적 풍토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에 대한 처방도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모집단위에서 광역단위로…… 그것도 저는 효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동일계 진학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설립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저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나갔기 때문에 우선 미세한 조정이라도 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사실은 정부가 발표한 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모집단위를…… 외고가 이미 포화상태로 많은 지역, 서울, 경기, 부산 같이 많은 지역은 더이상 외고를 설립하지 않도록 교육감들에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고의 모집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합니다마는 앞으로 외고가 장학지도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그 기회를 2008년까지 시간을 주고 2008년경에 전문가로 하여금 전국 외고의 운영상황을 평가한 뒤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외고의 설립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외고는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로 모집단위를 제한해서 정상적인 외고로 운영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외고는 여러 가

지 부작용만 낳지 외교 본래의 기능을 못하니까 혁신학교라든지 다른 학교로 전환을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책방향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시범운영 기간 아납니까? 학교설립권이 나 이런 것이 일선 시·도교육청의 권한이지만 중요한 국가정책,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책임도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책무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사고 같은 경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납니까?

공영형 혁신학교 발표하셨는데 제가 작년 2월에 대정부질문 때 발표해서 그동안 준비하셔서 내놓으셨는데 이것도 지금 법률적으로 혁신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아납니까? 그래서 시범운영하시겠다는 것 아납니까? 특목고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의 책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의 접근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외교라든지 이런 특수한 고등학교들이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고 이것에 대한 시정과 교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제한하고 교정하는 것은 어디 책임입니까? 일선 시·도교육청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은 결국 종합적인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위원 그리고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하고 혹은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도 있는 것 아납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미세한 조정에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외고가 재정자립을 하고 있고 지금 외교가 대부분 사립학교인데 재단의 재정기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 유형식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일반 목적사업비와 시설비를 작년 기준으로 해서……

○최재성 위원 전입금 기준으로 포선 관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니, 전체 운영비 중에 재단에서의 지원금이 몇 %나요?

○최재성 위원 인건비든 뭐든 이런 것이 일단 일반학교보다 등록금을 3배 받을 수 있는 것 아납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제보나 이런 것을 접한 바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가외로 들어가는 돈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정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 앞에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재단에서 무수한 돈을 쏟아 부어서 양질의 교육을 한다고 국민들이 착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적인 통제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논거로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또 하나는 축구선수들이 국가대표 11명에 끼려고 수만 명의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의 실책 중의 하나가 외국어고등학교 몇 개 안 되고 자사고 몇 개 안 되는데 모든 입시학원에 외교반이 자사고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라는 베스트 일레븐에 끼려고 수만 명의 축구선수들이 도전하는 것처럼 여기에 가려고 국민 전체가 아우성 아납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지 몇 개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이 학교에 갈 실력이 되든 안 되든 거의 모든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들을 목표에 두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외교의 규모를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전체를 놓고 대화와 설득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과정에서 전문가 토론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국민적 절차 이런 것을 조금 더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영형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고 정책으로 피력하는 방법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규모를 혹시 제한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관점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교육시장도 자사고 하나 때문에 작동을 합니다. 서울대 입시

안 하나 때문에 작동하고 이것이 과도한 과열 입시풍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특히 교육부에 아쉬운 것이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가 좀더 국민들과 충분한 대화과정을 거쳤더라면 좋았겠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부가 혁신학교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1년여에 걸쳐서 학부모님들과 전문가들과 다양한 토론과정을 거치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외교 문제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둘러 발표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악재, 외교와 관련된 두 가지 요인이 생겼는데 그 하나는 2008년도 입시제도에서 학생부의 반영률이 50%로 높아지도록 되어 있다는 정책의 목표가 설정되고 그것이 대학으로부터 다동의받아서 준비되어 가는데 그렇게 되면 외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훨씬 더 내신의 불이익이 커지고 그러면 사교육 의존도가 더 심해지고 많은 비교육적인 현상이 증가할 텐데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주로 이와 같은 형태의 외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110개의 학교나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제 7월 1일이 되면 그 자치단체장들이 취임사를 하고 그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전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제도니까 혁신학교로 바꾸든지 일반 다른 학교로 바꿔달라고 하는 정부로서의 정책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견잡을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나아가서는 2008년도 입시제도 자체의 운영도 어려워진다는 절박감 때문에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은 2008년 이후로 넘기고 우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작은 부분, 외교의 설립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모집단위를 과학교등학교처럼 광역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작은 부분만 제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사립 외교의 재단전입금 규모에 대해서는 혹시 뒤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지 모르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 우형식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주호

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를 주로 분석해 놓은 글이었는데요.

‘교육부에는 마피아라는 이름을 붙인 특정 지역 출신들의 단체가 몇 개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은 왔다가 1년 안에 바뀌고 하니까 말도 잘 듣지 않고 그다음에 장관이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루어 버리면 장관이 바뀌곤 해서 문제가 많다’ 이런 유의 글을 몇 군데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관은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부터 1년 5개월간 교육부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던 교육부, 저도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안에 들어와 보면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많이 하고 수요자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정책 하나하나가 너무 큰 갈등을, 이해집단 간에 너무 큰 갈등을 자아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비쳐져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의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등 사교육비가 엄청나다,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해외 조기 유학생들이 엄청나서 국부 유출도 많고 조기 해외 유학생들의 자기 정체성 문제도 많아서, 하여튼 대한민국의 교육이 질적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우리 장관께서는 평생을 경제 관료로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의 교육에 관해서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셨는데요, 특별히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한 임명권자

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제가 경제 쪽에서 한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중장기 정책 개발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때도 교육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에 관한 토론 그룹도 운영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기회가 있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교육 분야 관계자들과 많은 토론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주장했던 의견들을 임명권자가 기억을 하고 임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로 교육 전문가라든지 대학총장이라든지 교육과 관련 있는 분들을 교육부장관에 임명해 봐도 별로 썩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경제 관료로서 비교적 교육과 떠나 있었고 또 교육의 경쟁력 없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교육에 도입해서 교육부를 비롯한 우리나라 교육 체도를 좀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꿔달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임명 당시 언론에서도 그런 기대를 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언론에서는 그런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호영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2년 다 되어가지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이제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주호영 위원**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면들을 하려고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일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났다고 평가하시는지는 위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사립학교법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위헌심판제청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주호영 위원** 교육부에서 그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제출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어떤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위헌이라는 각계의 지적에 관해서 각각 대응 논리로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위헌성이 없다는, 즉 교육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다는 쪽의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일부라도 위헌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호영 위원** 자, 이렇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법조문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14조제4항에는 학교의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제25조의3제4항에는 학교의 “설치·경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설치·운영과 학교의 설치·경영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설치·운영·경영을 같은 법에서 서로 비슷한 용도에 다르게 표현했다든가 하는 등의 입법 내용이 자구 등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상임위와 법사위 등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는 과정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주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0조의2제1항제1호 한번 보십시오.

“이 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법만 위반하면 이 조항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은 “과”보다는 ‘또는’이라는 표현을 했어야 맞지 않나 하는 지적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조문들과의 전체의 맥락, 흐름…… 그리고 문리해석을 하면 주호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면이 나옵니다마는 전체 개정 취지와 조문과의 관계를 가지고 논리적인 해석을 하면 개정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 말에 딱 답변해 보십시오.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립학교법만 위반한 경우에 임원 승진취소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문리해석을 하면 모두 다 위반한 경우에만 되는 것으로 됩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지요? 문리해석 이외에 다른 무슨 해석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러나 이 조문이 임시 이사의 승인에 관한 조항인데 다른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가지요.

○주호영 위원 뭘 종합적으로 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전체적인 임시 이사를 선임하는 원인이 되는 조항, 그다음에 그런 조항들이 또 다른 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주호영 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또는’으로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조항에 의하면 이 세 법을 동시에 다 위반해야만 임시 이사를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다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궁색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5조의3제2항 한번 보십시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선임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글썄요……

○주호영 위원 예컨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선임한다’든지 아니면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가 추천한 자’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비문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에서”라고 하면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입법 취지는 정이사의 선임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것인

데, ‘의견을 들어서 추천한 자’라든가 이렇게 분명히 해 줘서 동격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지적이신데 전체적으로 문장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매끄럽지 못한 정도가 아니지요. 이것 자체가 문법에 안 맞는 비문이지요. 자, 또 보겠습니다.

제54조의3제1항제2호에 보면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서 해임되고 5년이 경과해야 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년 된 사람은 복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는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고 해 놓고, 제2항에서는 5년이 경과해야 학교의 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전체적 맥락으로 보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복귀할 수 없는 것이니까 3년만 경과하면 될 수 있는 것인데, 거기 “5년이 경과한 자”라는 조항하고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것도 입법의 불비인 것 같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부칙 경과조치에 보면 제22조제2호와 제3호는 포함되어 있고 제4호와 제5호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중에서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 즉 회계부정이라든지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서 해임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빠져 있는 제4호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제5호에 4급 이상의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 사학법 시행과 동시에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2조제2호·제3호·제4호·제5호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왜 제2호와 제3호는 부칙에 포함시켜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고, 제4호와 제5호는 안 되도록 빼놓은 것입니까?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것을 구별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주의나 입법 착오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이 부분이 당초 복기왕 의원이 발의했던 안에는 지적하신 그런 안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종 통과되는 과정에서 수정의결 과정에서 이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2호·제3호·제4호·제5호가 함께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같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더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요, 물론 법을 만드는 책임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보고 이 법에 대해서 잘되었느니 잘못되었느니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회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 장관께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문법에도 맞지 않고…… 우선 법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이런 것은 빨리 고쳐야 안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

○**주호영 위원** 예컨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임시이사 보냈는데 우리는 초·중등교육법에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이 사립학교법이 입법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 간에 좀더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위원회를 거쳐서 했더라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거친 부분들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이 법의 집행을 위해서 관계 있는 다른 조문들과의 관계를 보아서 합리적인 해석방법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시행령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을……

○**주호영 위원** 장관께서 아까 집행기관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집행기관이 법을 마음대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합리적인 해석이 됩니까? ‘and’라고 되어 있는 것을 ‘또는’이라고, ‘및’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또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까?

○**위원장대리 유기홍**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호영 위원** 하여튼 구구하게 자꾸 정당성을 옹호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물론 문제된 것이 개방형 이사라든지 임시이사 파견 등 여

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이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형식적인 오류가 있는 것은 시인하고 빨리 고치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자료제출인데요, 장관님 답변하시면서 이번에 외교 조치 이것이 전국 110개 지자체 단체장들의 공약 이것과의 연동 때문에 우려를 하셨고, 그러면 그 110개 지자체의 리스트가 지금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기존의 학교하고 신설하겠다고 이번에 신임 당선자들이 공약한 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위원장대리 유기홍**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춘 위원** 예, 김영춘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올 때 이런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모든 아이들이 자기 개성과 특기에 맞게끔 골고루 잘 교육받는 그런 체계,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보도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외교 문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장관님! 외교, 사고, 자사고 다 합쳐봐야 재학생이 한 2만 명 됩니까? 2만 명이 좀 덜 되지요? 고등학생만 따지면 한 180만 명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고등학생이 한 170만 정도 되고요.

○**김영춘 위원** 1% 정도의 최상위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교육 문제가 다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알파하고 근시안적인 교육에 우리 모두가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는 정부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학교도 책임이 있고 학부모도 책임이 있고, 심지어 언론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1%의 학생들이 잘 교육받고 최고 엘리트로 성장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과 함께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잘하

는 학생들, 공부 성적은 1%에 안 들더라도 이러저러한 자기 특기들이 있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잘 길러내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보통 학생들을 잘 격려하고 전인으로 길러내는 작업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교육부장관님이 각 학교 졸업식할 때 상을 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줍니까? 대학 빼고 고등학교 기준으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고등학교에는 주는 게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주는 게 없지요?

대통령상도 없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미국에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 대통령이 상을 남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고 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충 상위 한 7% 범위 이내에서 성적이 좋거나 다른 데 뛰어난 그런 평가를 받는 학생들에게는 대통령상도 주고 주지사상도 주고 그래서 격려해 줍니다.

제가 그전에 왜 7%를 기준으로 했을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대충 그런 정도 기준 이상의 학생들이라면 사회를 앞에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런 범위를 놓고 봐도 우선 우리의 엘리트 교육만 하더라도 굉장히 폭 좁고 근시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인커리지(encourage) 시스템을 교육부장관부터 솔선수범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께 건의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생들에게 1년간 쓰는 공교육비가 36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중에서 도서구입비…… 도서관, 도서실들이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무자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재정기획관 황인철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봐야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아마 따지기 창피할 정도의 예산

일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지요? 그런 항목이 없지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재정기획관 황인철 설치운영비에서……

○김영춘 위원 그렇지요, 운영비 안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다른 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급하니가 도서구입비나 도서관 운영비로 쓸 예산들이 거의 없는 게 대부분 학교들의 실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도서관 정책 쪽 설명하셨는데, 껍데기는 잘 지어놓습니다. 새로 지어놓은 학교에 가보면 특히 도서관 시설들은 잘 지어놨어요.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서가도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놓습니다.

그런데 책이 없어요. 지은 지 몇 년이 되도록 도서관 잘 만들어 놓은 서가에 책이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차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주 부자 동네에는 학부모들이 부담해서라도 책을 채우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전국 지역에서는 도서구입 예산이 없어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하드웨어는 잘 지어 놓지만 정작 중요한 알맹이를 제대로 채워내는 데는 교육 정책 혹은 예산 정책이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당연히 도서구입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학교의 경우에는 책들은 차 있습니다만 신규 도서 구입 예산이 없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업데이트된 자료, 도서들을 도서관에서 빌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신설학교대로 기존 학교들은 기존 학교대로 도서구입 예산을 정책적으로 별도로 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는 우리 안민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과 관련된 것인데, 제가 작년 예결위 때도 이 문제를 질의했었는데요. 체육 수업 문제입니다.

7차 교육과정을 내년 2월에 개정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7차 교육과정부터는 지금 수시 개정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영춘 위원** 제가 보고받은 것은 내년 2월에 개정 예정이라고 받았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부분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우리나라 교육 이념이 전인교육을 한다 해서 지·덕·체 교육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특히 고등학교를 놓고 볼 때 지식교육은 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덕성교육이나 체육, 체력교육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대학입시 준비 교육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김영춘 위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김영춘 위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라는 게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특히 체력을 연마하는 체육교육이라는 것은 대학입시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학생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게 그냥 다른 과목하고 똑같이 선택으로 취급되고 있고 그것은 학교장이 선택하고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등한시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다른 과목들도 다 선택이라고 하지만 국·영·수나 이런 과목들은 수능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체육은 수능과목도 아니고 대학입시에 반영도 안 되니까 당연히 선택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평균 한 75% 정도가 선택하고 있네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여학생은 71%고 남학생은 81%입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도 미술·음악·체육 이렇게 묶어놓고 선택하라고 하니깐 음악이나 미술이 좀 어려운 학생들은 체육을 선택하고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체육은 여러 개의 예체능 과목 중의 하나가 아니지요.

모든 학생, 심지어는 장애인 학생들도 체육을 선택해서 그 학생에게 맞는 체력을 연마하는 기

술도 가르쳐 주고 습관도 들여 주고 해야 되는 것이 그 학생이 평생 잘 살아갈 수 있는 밑천을 만들어 주는 좋은 교육이지요.

그래서 이번 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적어도 체육만큼은 필수과목으로 만드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우선 체육수업에 관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대학입시 준비 교육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7차 교육과정은 전국의 모든 학교가 모든 과목에 걸쳐서 거의 여유 없이 시간이 딱 짜여 있기 때문에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쪽에서 피해를 보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도 평소에 교육부 안에서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님이나 안민석 위원님 지적하신 이야기를 간부들에게 자주 합니다.

체육만큼은 이것이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가능하면 빨리 체육을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이고 당연히 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구입 예산을 매년 늘려 가고 또 도서관을 정보화 시설로 바꾸는 것을 계속 예산 지원을 해서…… 상당수의 학교들이 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정보화 도서관으로서의 설비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신간 도서 구입비가 부족하고 또 몇몇 열악한 지역교육청 여건에서는 충분한 도서를 못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빠르게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사업인데, 문제는 이것이 지방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청 교육 재정이 지금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하나의 평가요소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정하는 그런 정책으로라도 유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도지사로부터 상을 받는다는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입시에 표창을 받으면 유리하고 불리하고 하는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 제도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교육부장관이나 이런 상을 받는 경우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슨 특별한 선행을 했다든가 특별한 업적을 올렸다고 하는 경우에만 대통령이나 장관의 상을 받는데,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해서 교육적으로 가치있는 이런 포상제도를 확대하는 것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예,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저는 아까 업무보고 받은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 보고 또 주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교육 강화 방안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책자에 보면 주로 인적자원 개발의 국제화와 관련해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제 질의의 요지는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할 의사가 없으신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아마 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들 다 만나 보면 아시고 느끼시겠지만 사실 초등학교 사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목은 영어이지요. 그리고 교육격차가 다양하게 발생하지만 교육과정을 놓고 보자면 영어에서의 격차가 점점점점 학년이 높아갈수록 교육격차를 벌리는 주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대체로 공감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임해규 위원** 그래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이 있고 또 우리도 이제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이런 격차, 그러니까 계층 요인에 의한 격차를 가급적 줄이도록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렇게 볼 때 저는 공교육 내부에서 이런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역시 영어교육에서의 격차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얼마 전에 어떤 신문 기사에서도,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이제 사회적 합의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교

육과정으로 도입하고 있으니까요, 그 자체는 논란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고, 그것은 사실이겠지요, 제가 개별적으로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시다만.

그렇다면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 현황은 대체로 비율상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아주 낮은 비율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지금 1950명이 들어온 것으로 통계에 집계되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중에 초등학교가 한 어느 정도 돼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초등학교는 한 20% 정도……

○**임해규 위원** 전체 초등학교 숫자가 약 한 5700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한 1000개 정도는 있다 이 말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초등학교를 따로 구분한 통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 전체로 18.3%입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까지 약 3000개 중학교에 총 거의 3000명을 다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사업의 순서로 보아서도, 효과 면에서도 그러하고, 이것이 전부 다 주로 그간의 교육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말하기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화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의사가 어떠신지,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 왔고 중학교가 넘어서면 언어습관이 굳어지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들과의 대화가 중학교 때까지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우선 예산 형편상 중학교를 먼저 채우고 초등학교는 그다음 순서로 넘겼는데 영어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 통계는 정규 교과 시간

의 선생님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원어민 교사나 또 지역사회와 영어 교습 능력이 있는 선생님들을 불러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마땅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정규 교과 시간에 뭔가를 해야지,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는 학교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안 되니까 자꾸 사교육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교육을 없앤다고 하면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근본 처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초등학교부터 잘되면 좋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하실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방향을 잘 잡아 주도록,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교육부와 그 산하단체에 많잖아요. 교육개발원도 다 정부 산하기관이니까 연구를 좀 분명하게 해서서 그 효과와 효율성과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서 지침을 잘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부터 원어민 보조교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어민 보조교사를 외국에서 이렇게 모셔올 때 다른 나라들은 정말로 국가에서 공인할 만한 기관에서, 즉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우리나라 대사관이 외국에서 데려올 때 거기서 많이 모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 더 저렴하면서도 더 고급의 인력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부 사이트에서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고등학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요, 실태를 보니까 실업고가 이제는 더 이상 최종 학교가 아니고 전문대 이상이 최종 학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업고도 이미 졸업생의 약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대 이상을……

그래서 실업고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전환되어

야 된다, 그를 위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정보산업고와 공고를 합하면 실업고가 아직도 숫자로는 전체 고등학교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기초생활보호 수혜자의 자녀들 대부분이 실업고에 가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만 해도 학생 전체 숫자의 약 30%의 학생이 기초생활보호 수혜자 자녀들이에요. 그런 정도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격차를 얘기할 때 학교수로 3분의 1이나 되는, 대한민국 고등학생 숫자의, 학생들 숫자로 보면 4분의 1입니다. 학교수로 보면 3분의 1 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교육격차 해소를 얘기하려면 실업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정부의 지금 현재 대책은 명문 특성화고를 하신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으로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디자인고나 자동차고나 조리과학고나 이런 것을 해서 명문화를 시키면 전문대학교에서 금방 그것 다 개설해요. 그러면 우리 직업현장이라는 데가 전문대를 나온 학생을 뽑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잘 안 뽑잖아요.

즉,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좋은 것을 배웠어도 뽑는 사람이 가급적이면 전문대 출신을 뽑는다고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고학력자를 뽑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자면 저는 그 성과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나 앞으로 지향을 놓고 볼 때는 얼마나 오래 가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현실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업고를 명문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을 현재 91개교에서 2010년에 200개교로 확대하게 되면 현재 실업고가 총 약 700개가 되니까 약 3분의 1 정도가 되는 실업고를 그렇게 명문 특성화고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우려가 됩니다.

그게 우려가 되는 것이 다들 공감이 된다고 하

면 또 부분적으로는 실업고와 전문대와 산업체 연계 협약학과도 하시고, 이런 계획 좋은 계획이예요. 저는 이런 것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변화가 이제는 해야 된다고 보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하면 역시 실업고의 어떤 위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장관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홍 간사, 권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아까 말씀하셨던 영어교육에 있어서 지자체의 지원을 얻어 내는 문제는 저희 교육부에서도 교육감들,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들에게 여러 가지 경로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또 많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의왕시라든가 전라남도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인접 도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데도 지자체의 부담으로 관내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한 명씩 다 배치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정부도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거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과 잘 연계된 교육 체계로 가지 않으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한 6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평균 진학률은 82%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직장을 처음 갖는 연령은 27세로 OECD 평균 22세보다 다섯 살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학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 시범운영이 필요해서 이번에 협약학과 제도를 가 능하면 널리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성화 고등학교는 졸업생이 전부 직장으로 가거나 자영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도 다 전문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도 협약학과 대상에 적극 포함을 시켜서 어떤 분야에 관해서 직업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취업하고 또 그 취업 분야에 관해서 계속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취업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 협약학과 사업을 산자부와 협력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결과를 평가해서, 2차 인적자원개발 5개년 계획이 2010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에 대한 학제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가, 구라과처럼 4년제 고등학교로 해서 종합고등학교 형태로 가서 2년은 공통으로 가르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 2년을 시키는 그런 직업교육 방법, 그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은 직업교육을 시키는 이렇게 둘로 가르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라과 강소국가들을 보면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도 거의 또 대부분이 평생토록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전체적인 직업교육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임 위원님과 같이 협의하고 또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 제가 보충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임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의 질의가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감사원의 사학비리 감사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124개 학교, 대학교가 24개이고 중·고등학교가 100개 학교였는데요. 이것이 중간 결과 발표인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90개 이상의 학교에서 비리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 중에서 대학교 7개, 중·고등학교 15개 해서 관련자 48명을 검찰에 우선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들이 좀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사례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데 교비를 빼들려서 이사장 등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했는데요. 모 대학에서 기숙사비 집행 잔액을 예·결산에 잡히지 않는 부외 계좌, 그러니까 비자금 계좌로 관리하면서 45억을 조성했는데 아주 특징적입니다.

어머니가 이사장이고 아버지가 학장이고 아들이 기획조정실장인, 이렇게 해서 개인 계좌로 빼돌리거나 땅을 사는 데 10억 원을 사적으로……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야당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해서 대학은 비리가 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중·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중·고등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리 사례들이 실제로 밝혀졌다는 것이지요.

공사 대금을 부풀려서 빼먹고 하는 일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번 감사 결과를 보니까요, 아예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해서 돈을 빼돌린 경우도 많이 있는 게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우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야당에서는 계속 재개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실제로 사학비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밝혀졌다 하는 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분규가 많이 일어난 데들이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이 제기를 해서 대학에서는 그런 분규를 통해서 비리가 많이 밝혀졌습니다만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은 비리가 존재한다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실제로 이 감사 결과는 감사원에서 한 것인데 이것을 교육부에서도 통보를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유기홍 위원 교육부 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하거나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최종 결과가 통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교육부 감사가 중·고등학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교육청에 위임해서 지방교육청에서 해 왔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예, 이제 7월 1일부터 개정 사립

학교법이 본격 시행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일입니다만,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조항을 위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는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 중인데요.

그런 의료법 개정과 별도로 시각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맹아학교 고등부 2학년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보면 일주일 35시간 중에 안마 관련 교육이 총 23시간을 차지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일주일 35시간 중에서 25시간을 안마교육을 받으니까 사실 이렇게 졸업한 시각장애 학생들은 나와서 침을 놓는다는 안마를 하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 외에는 별로 교육받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위헌 판결에 따라서 시각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그런 직업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시각장애 학교의 졸업생들이 통계를 보면 53%가 안마나 침술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고등학교 교육과정 144개 단위 중에 25 단위를 소위 물리적 방법에 의한 의료 치료 방법, 의료과목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위헌 판결 결과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할 요구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국립특수교육원장께서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편해야 될까, 특히 시각장애인 학교에 대해서 전문 음악가나 속기사나 상담사나 이런 다양한 직종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위한 개편 연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가 나오는 대로 교육과정을 빨리 개편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예, 좀 시급하게, 한쪽으로는 지금 의료법 개정도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의…… 지금 사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를 상실하게 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 개편 노력이 좀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립외고 고등학교 재단의 전입금 규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료 확보를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급하게 통계를 잡느라고 서울시에 있는 사립외고 6개 학교의 재단전입 비율을 보면…… 학교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원외고나 한영외고는 재단전입 비율이 하나도 없고 명덕외고는 0.3%, 서울외고는 0.01%, 대일외고와 이화여자외고가 10%가 넘습니다. 대일외고는 10.4%, 이화여자외고는 14.5%입니다.

○**유기홍 위원** 액수로는 어떻게 되지요? 액수로는 예컨대 이화여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이화여고의 경우에는 전체 소요예산 7억 2100만 원 중에서 2억 1300만 원이 재단에서 전입되었습니다.

○**유기홍 위원** 예,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재단전입금이 0이거나 오히려 교비에서 횡령해 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아까 최재성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시내 외고 6개 중에서 2개 학교는 재단전입금이 0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가지고, 일반 학교의 몇 배에 달하는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들 월급 주고 그러면서도 또 정부 지원을,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는 아니지만 학교 시설을 개수하거나 하는 데서는 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실상에 대해서 또 국민들은 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초빙·공모제와 관련해서인데요. 혁신위에서 논의되던 안이 있고 또 교육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이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래 초빙·공모제를 한다는 취지에 비해서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안이 좀 미흡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모셔 오려면 예컨대 교수를 얼마, 몇 년 이상 거친 분들만 대학교 총장을 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하고

마찬가지로 교사자격증이나 교장자격증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을 초빙해 오자는 게 초빙제나 공모제의 기본 취지인데 실제로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특성화고, 특성화 중·고등학교 한 20개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장자격증, 그것도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니고요. 지금 20개 학교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장으로 모셔오기 위한 것이고요. 다만 그 비율은 당초 시안이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혁신위 안이 결정되기 전에 현재의 범위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혁신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의가 되면 그 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모형 교장제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이 점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문제 말고도 그렇게 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혁신위는 혁신위대로 안을 만들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안을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워 보이는 점도, 이번 과정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먼저 추진했다가 나중에 혁신위에서 논의되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점도 혁신위하고 잘 의논하셔서 혼선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보충질의를 안 하는 대신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국사편찬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온라인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아마 어제까지 5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마 2500명 정도……

○**유기홍 위원** 하루에 2500명 정도요?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예.

○**유기홍 위원** 사실은 이 실적이 처음 CD로 만들어졌을 때 가격이 100만 원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한 500만 원 됐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저작권료나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하고 국민들에게 완전히 무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데, 이것 저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홍보는 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라고 하는 것이 국정홍보처를 이용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각 언론사에 하는 그 방법 외에는 저희 인원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도 되고요.

○**유기홍 위원** 교육부에서 학교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꼭 전문연구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그런 점에서, 이것이 역사를 조금 더 친숙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그동안 56만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도 활발하게 왕조실록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유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하는 일을 소상하게 알려 줘서, 또 저희들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한 분이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5분씩 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맨 먼저 보충질의해 주실 분은 이주호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호 위원** 저는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용히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교육행정의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부총리도 지난번에 동의하신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

다.

○**이주호 위원** 그래서 제가 성과지표를 개선해 국회에다 보고를 하라고 해서 아마 오늘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성과지표의 내용을 보면 연초에 갖고 온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몇 가지를 제가 지적할 것인데요, 성과지표를 세세하게 봐 주시지요.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95페이지를 보시면 만족도에 대한 2006년도 목표가 나옵니다.

지금 놓여준 우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학부모·교사·학생 만족도가 56점이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종합진로정보망도 만족도 목표가 55점이고, 학점은행제 55점, 이것이 다 55점대를 만족도 목표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50점대면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낮게 목표를 세워 놓고 안이하게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성과지표를 통해서 주요 정책과정들의 집행에 실효가 있도록 하려는 것은 참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인데, 다만 우리 정부가 이것을 시작한 것이 사실상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로서 측정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점들에 관해서 아직은 좀 서투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좀 소극적인 목표를 정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지금은 20개 이행과제만 성과지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더 세부화하고 또 객관적으로 제대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목표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관리체도는 사실 이 정부가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적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부가 유독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총리께서는 계속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진전된 모습이 안 보이고요,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지표에 빠져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업성취도에 대한 지표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이 학업성취

도 아니겠습니까? 학업능력인데 이 부분은 전혀 목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고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뒤처지는 학교,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다 빠져 있는데 이것 이유가 뭐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90개 중점지원과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평준화,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대면서 계속 미루지 마시고 올해 내로라도 빨리 추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학생·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라는 것이 나옵니다. 앞에서 제가 외교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육선택권 확대라는 것이 교육부 문서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 놓고는 또 외교 문제 같은데 가 가지고는 입시나 이상한 이유를 대 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선택권을 줄이거나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교육부가 정말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야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입시이사 문제를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입시이사에 대해서도 제가 국회에서 실제로 입시이사 파견사유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입시이사 파견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정상화 노력을 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6월 말까지 입시이사 파견 대학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왜 입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최근 3년간 6개 대학을 정상화했습니다마는 나머지 20개 대학 중에서 10개, 우리가 보기에 한 10개 대학은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당초 입시이사를 보냈던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는데 그동안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

다.

그래서 정상화를 하는 쪽으로 밀고 가면 학교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설득하면서 가려다 보니까 시간이……

○이주호 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것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정상화의 가장 큰 기준이 구성원 간의 합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성원 간의 합의를 교육부가 계속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최근 경인여대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경인여대의 경우에 학내 구성원들에 의해서 불거진 비리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는 원칙에 따른 책임경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규의 주도세력들이 계속 학교에 남아서 학내 정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를 하니 결국은 구성원 간의 합의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유로 교육부가 계속 정상화를 미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성원 간의 합의를 강조하면서 정상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 원칙에 따른 정상화하고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부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교육부가 계속 이렇게 구성원 간의 합의나 정치적인 눈치를 볼 것이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에서 지적하듯이 법원으로—법원의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 권한을 넘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가 정상화 대상 학교를 정할 때는 구성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정상화 절차를 밟아 가려고 할 때에 계속 갈등을 막고 있어서 지연된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 개정사립학교법의 시행령에서 별도의 대통령령을 만들어 입시이사 선임 방법이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금 더 투명하고 분명하게 제한을 해서 학내 구성원 추천인사가 3분의 1 이상 선임되도록 하고 또 관할청 지명자는 3분의 1이 넘지 못하도록 해서 관할청의 권한을 좀 줄인다든지, 또 입시이사 선임 시에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 규정을 두어서 지금보다 조금은 나

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지적하신 문제들을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래서 사실 핵심은 사학의 분류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성 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PISA 평가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상위권의 성적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후에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와서 서구 선진국에 비해 인적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사실 잠재력과 창의력, 그다음에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배양해서 사회를 리딩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초중고 시절부터 기술만을 가르치는, 입시기술만을 가르치는 이런 것으로 전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도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요. 입시 문제에 대한 수술, 변화, 이런 것을 국민들이 한 걸에서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반대편에서는 사실 가난이 대물림되고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교육이 작동하기 때문에 부자,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에 올인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만큼 이것이 가난의 대물림이라든가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이것이 양극화나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는, 그래서 평등한 교육은 불가능하지만 기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의 몸살을 지금 앓고 있고 갈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이번 5·31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내세웠던 특목고나 이런 것이 110개, 그러면 평준화 기준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평준화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평준화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약대로 그런 특수목적고 같은 경우가 110개 정도 생기면

입시정책 및 평준화정책의 근간은 다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오면 특목고 등록금을 일반학교 수준으로 묶어내는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등록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해서, 좀 전에 통계를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립재단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가지 못하는 것을 제어하고 통제하려는 교육부나 정부당국의 이런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균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근본적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폐지부터 시작해서 특목고가 갖고 있는 각종의 혜택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특목고가 당초 설립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회를 2008년까지 주고 2008년 이후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를 해 보고 특목고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재설정하려고 합니다.

○**최재성 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고요. 사실 그런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공영형 혁신학교가 제안되었고 지금 국민들 앞에 일단 공개를 하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 대안으로서의 공영형 혁신학교의 위상이 분명하게 성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철학적 동의, 또 정교한 작업,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아서 개념이나 혹은 추진방향에 대해서 좀 혼돈이 있는 것 같고…… 여기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교육부에서 발표를 해도 국민들이 정확하게 접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개념 정리하시고 자사고나 특목고하고는 콘텐츠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교육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그 원칙을 좀 견결히 해서 잘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그것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고, 한두 번의 토론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구를 했는데도 무슨 형식 운운하면서 제가 몇 번의 접촉을 요구했

는데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것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의 교육제도를, 특히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등교육의 새로운 전범을 만드는 작업을 밤새도록 매일 토론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것도 또 다른 무사안일이라고 봅니다.

혁신학교 하나는 어디 저 떨어진 들판에 그냥 일반학교 하나 짓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교육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정교한 작업이고 열정이 전제된 작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따져 묻겠습니다. 정말 교육부 자세 좀 바꿔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 당부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여야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시리라고 보는데요. 후반기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업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의 대안을 그동안 무수하게 요구했는데 딱히 제 손에 보고서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면밀히 연구를 하셔서 정말 교육부가 국가 백년지대계를 주도하는 부서이니만큼 특히 부처 내의 말뿐인 혁신이 아니고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한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에서 많이 나온 것 중에서 외교 문제입니다. 외교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해서 외교의 내신 6등급인 학생하고 일반고 1등급 학생의 성적이, 학업성취도가 거의 같다면 현행 내신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내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외국어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의 내신이 불리합니다. 외교에서 6등급을 받으면 일반학교의 1등급하고 같은 비율을 적용받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에 가겠다고 하고 공부를 더 시키려고 하고 아이에 대해서 정성을 더 기울이거든요. 또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런가? 근원적인 문제를 교육부에서 이제는 풀어 제치고서 근원적으로 정책 해결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평준화 제도가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경쟁력 있는 아이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예원중학에 보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머니 마음으로 거기를 보내면 입시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옛날 경기여중하고 같다는 거예요. 주변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나도 솔깃해 가지고 '아, 거기 좀 보내 봐야 되겠다' 해서 보냈습니다. 거기 보내고 또 특목고, 서울예고를 또 보냈어요.

부모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돈이 들어가면서 또 애를 쓰는 것을 알면서도 보내거든요. 이렇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고 더 똑똑하고 더 알곡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준화 제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외교를 줄이려고 들고, 또 제한을 해서 어느 시·도에 한해 가지고 그 시·도에만 국한해서 가게 하고, 또 자사고, 특목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시간 관계로 이따 일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인 교장공모제야말로 철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국은 2004년도에 교장 국가자격전문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미국도 1994년도에 교장자격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장을 길러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니까? 교장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몰이해한 발상을 하는 제도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부총리께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 개선특위안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뽑도록 한다면 4년마다 한 번씩 로테이션이 되니까 교장을 뽑겠다고 교사와 학부모들이 야단법석을 할 게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학교 내의 파벌도 있을 것이고 분란이 야기되고 학교가 본연의 의무, 본질을 추구하는 교사들의 안정을 결여하고 또 결과적으로 교사가 안정이 안 되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등용된 교장은 정말 교장으로서의 본질을 추구하는 소신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학교 경영을 하기보다도 또다시 재선을 위해서는 포퓰리

증적 학교 경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혁신위 특위를 봅시다. 거기를 보면 교직경력 10년 이상 교사는 누구나 교장직에 응모해서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무자격 교장공모안을 6월 9일 특위 전체회의에 회부한 결과 부결되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김영숙 위원 부결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결된 특위 안을 가지고 또 가결될 때까지 회의를 열자고 하는 것인지, 7월 초에 혁신위 본회의에서 재논의한다고 합니까. 그것도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재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다면 부결하자는 그것은 가결되어야 된다는 모범답안을 정해 놓고 가결될 때까지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특위를 열어서 다루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만일 이것도…… 저는 정말 참 우스꽝스러운 회의를 만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특위 안이 만일 통과된다면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태세입니까? 교육혁신안, 무자격 교장공모제, 수용할 생각인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먼저 교장공모제부터 답변을 드리면, 지금 특위라고 하는 것은 혁신위원회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고 혁신위원회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단체들이나 교원단체들에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23명의 위원을 선임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열 분이 합의한 안을 23명이 전체회의를 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해 혁신위원회에서 7월 초에 우선 특위를 다시 한번 운영해 보고 특위 안에서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혁신위원회가 별도의 안을 만드는 데, 그럴 때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또 교육부가 내놓은 안도 고려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좋은 안을 만들어 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혁신위 특위에서 부결됐어요. 거기에 보면 반대가 11명, 찬성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결된 것을 가지고 혁신위 본회의에서 또 다루겠다는 것이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닙니다. 그대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부

결이 된 것이니까 현실적합성이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느냐, 수정을 해서 다시 논의를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부결된 안을 가지고 어떻게 좀 다듬겠다, 이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 안과 교육부 안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김영숙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1년 농사는 잘못되면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 농사가 잘못되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바꿔 놓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부총리께서는 정말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교육을 위해서, 백년지대계…… 여기에서 마음을 비우시고 정말 누가 욕을 하더라도, 반대해서 비난이 있더라도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외교에 대해서 평준화제도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委員長 權哲賢 간단하게 대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평준화제도는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1974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런 틀 속에서 고등학교 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또 많은 장점이 있고……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의 1만 1000개 학교에 똑같은 틀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어떤 제도를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평준화의 기본 골격을 지키면서 그 틀 속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형 혁신학교도 철저히 평준화의 원칙을 지키는 토대하에서 몇 가지 보완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김영숙 위원 그러면 평준화 틀은 그대로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세계는 교육혁명 중 아닙니까? 일본이 평준화했다고 지금 일본의 예를 들으

셨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니, 일본만 제외하고……

○김영숙 위원 일본이 평준화했다가 지금 꺼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委員長 權哲賢 정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예를 잘못 드신 것 같아요.

○委員長 權哲賢 그 정도로 마쳐 주시고요.

일단 보충질의 순서가 작성되고 나서 뒤에 신청하시게 되면 교섭단체별로 교차 순서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뒤로 좀 밀리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해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아까 초등학교 영어교육하고 실업교육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것에 관련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육의 중장기적인 변화, 발전 방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임해규 위원 그런데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실업교육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작년에 혁신위원회에서 실업교육 개편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와 협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협약학과 제도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만약에 교육혁신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신속적으로, 그때그때 어젠다를 새로 설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임해규 위원 그리고 어차피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과제도 수용하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부총리께서 하신 그런 것도 굉장히 유력한 하나의 직제개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제기한 그런 문제들의 위상에서 한번 실업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아까 혁신위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실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제기한

문제나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잖아요? 학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과제를 교육혁신위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가 2차 인적자원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그 속에 계획기간인 2010년까지 학제 개편의 큰 방향을 만들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뒤에 교육부가 학제 개편의 큰 그림을 만들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중론을 모으는 과정 작업을 혁신위원회가 좀 했으면 한나라는 희망 표시가 있어서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체제 개편이 학제 개편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혁신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이런 것이 보고가 안 돼서 신문에 가끔 기사화되면 보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께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쯤 알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우리한테는 그런 체계적인 보고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러실 테니까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혁신위원회하고 의논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제가 질의한 영어교육에 관련된 것인데요.

경기도에서도 영어마을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영어마을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요. 제가 경기도에서는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전에 어떤 신문기사에서인가 본 것 같은데, 부총리께서 경기도에 있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평가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언론에 의해서 잘못 전달됐는데……

○임해규 위원 아, 그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의정부에 가서 한 번 이야기를 하

고, 그것은 작년이예요,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으로 선거 전에 수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수원에서 이야기할 때 기자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보도는 지금 읽으신 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근본 취지는 아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도에서 영어마을을 만든 것은 참 좋은 투자를 바람직하게 했다,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모델로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2개는 이미 됐고 앞으로 하나 더 만든다니까 3개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또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자꾸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별로 만드는 것은 학교에다 했으면 좋겠다, 학교의 시설을 활용하면 돈이 덜 드니까.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도 편리하게 방과 후 시간을 늘 이용할 수 있고,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예산으로는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원어민 교사를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만약에 그런 취지가 아니셨다면……

저는 이 점도 그냥 간단한 대책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간에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려고 그랬지만 동력이 밑에서부터 안 올라오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영어마을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있는 부천에서 제가 한 공약도 영어마을 만들기입니다. 시장의 공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열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유권자와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교육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초등학교에서 공교육 차원에서 영어보조교사를, 원어민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또 원어민 보조교사가 이미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에도 일부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보상을 하고 약간의 시설만 있고 프로그래밍만 하면 그런 교사들을 방학 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런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요구와 동력을 어떻게 조직화하는가 하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봐요, 아까 그런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교육혁신위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디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 빨리 교육부에서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열기를 잘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영어마을을 혹시 배척하시나 하고 아까 여쭙 본 것인데 아니시라고 확인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가 지금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고, 그 안에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만들려고 하는 영어마을에 대한 지원 열정을…… 지방교육청에서 가서 잘 설득해서 가능하면 학교로 유치해서 만들고, 그 대신 그 돈으로 꼭 필요한 원어민 교사를 빨리 초등학교·중학교에 많이 배치해 주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임해규 위원** 제 뜻은 그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욕구가 전혀 해소가 안 될 테니까 진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부총리께서 그런 방식으로 막으셔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니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사례를 들면 저희는 폐교화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폐교는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건물의 일부를 아마 영어마을로 전환하게 될 거예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바로 그런 모델을 저희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지요. 이것은 다른 건물에, 다른 시설에 해서 방학 같은 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아마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실컷 이야기했는데, 비슷한 줄 알았더니

다르다고 하니까 두 분이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맞출 때까지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에게 보고서를 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교육혁신위원장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교육위원들과 한번 간담회를 갖는 자리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군현 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군현 위원** 학술원 원장님이 조금 답변…… 사무국장이 나오셨나요?

학술원 회원이 되는 선출 원칙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당 학회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3배수를 추천하면 그 3배수에 대해서 회원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부별심사위원회에 넘기고 총회에 넘겨서 결정을 하지요?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권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모 분야에서 학회에서 3명을……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올라오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권진수** 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이군현 위원** 그냥 3명을 학회에서 올려서 셋 중에서…… 학술원에서 알아서 회원심사위원회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회에서 올릴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권진수**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군현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원심사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라간 사람을 택하지 않고 2순위를 택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분의 남편 되시는 분하고 친구다, 그래서 정실인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학술원에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남깁니까?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권진수** 예,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권진수** 어느 분과……

○**이군현 위원** 경제분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경제분과, 제6분과 같은데……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권진수** 알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적어도 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 그런 정실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권진수** 확인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전공분야가 인문분야, 자연과학분야 두 분야가 있는데 전공분야가 몇 년도에 정해진 것인가요? 지금 학문이 여러 가지로 다기화되고 발전해서 전공분야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들면 음악하는 분은 학술원 회원이 될 수 없다고요. 미술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권진수** 그것은 예술원 회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여기에서는 될 수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술원이라는 별도 조직에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문사회분야하고 자연과학분야로는 학문분야를 다 커버하지 않고 빠진 분야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시대에 맞게 전공분야도 예를 들면 KAIST에는 바이오시스템공학이라는 학과가 있어요. 그런 분야를 하는 사람이 생물학에 지원했을 때 ‘그것은 생물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전공분야가 시대에 맞게 현대학문을 커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권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두 기관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여쭙보겠습니다.

국제교육진흥원에 여쭙보고 싶은데, 재외동포 교육용 교과서 및 교재 개발·보급을 위해서 11억 원의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책으로 해야 되나요? 정보화시대에 컴퓨터를 통해서 꼭 책으로 인쇄를 안 해도 되는 것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책으로 찍

어내야 되나요?

○**국제교육진흥원장 나종화** 보급하는 교재의 95% 이상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를 그대로 구입해 가지고 현지 학교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 자료를 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꼭 책으로 찍어야 되나요?

○**국제교육진흥원장 나종화**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군현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보화시대에 그 애들도 거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북한에 중국 대학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하는 영재교육을 북한 애들한테 바로 보낼 수가 없어서 중국의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애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콘텐츠를 다 보도록 하는 사업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국제교육진흥원장 나종화** 선진국은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후진국 같은 데는 인터넷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군현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국제교육진흥원장 나종화** 현지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원에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안마사하시는 분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면서 한강에 투신자살을 하는 시위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용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현재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위헌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모든 국민이 똑같이 직업선택을 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제가 법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현재 재판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굉장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고 상당히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업선택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눈을 뗐다는 전제가 성립될 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 옳지 한 분은 눈이 안 보이는데 이분은 축구선수가 된다는지, 각 회사에 취직한다는지, 눈 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직업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안 보이는 사람한테 안마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원에서 이분들에 대해 그렇게 현재 판결이 난 이후에 특수교육원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재활이라고 할까요?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한 재교육, 연수교육 이런 것에 대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대책을 논의해 본 적이 있나요?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용욱** 위헌 판결이 난 다음에 저희가 특수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전국의 12개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설문요구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료교과 외에 다른,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교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다음 주에 끝납니다.

현재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수합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직업교육교과는 전화상담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상담원이라든지, 피아노 조율사, 속기사, 또는 중증·중복장애자들은 단순 조립작업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사되었지만 거의 모든 설문지의 설문내용에 안마업보다는 이러한 직업들이 소득이나 장애유형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 원은 설문조사가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끝나고 난 뒤에는 과연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요구한 직업교과 과목들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향후 직업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타당성 조사를 현재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나 관련인들 또는 전문인들과 협의해서 심층적인 검토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 연구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군현 위원**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위헌 판결날 때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기본권 제한을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뒤의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의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이번 판결이 침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특수인들을 상대로 하고 연구하니까 꼭 연구되고 검토되어서 이분들에게 삶의 호구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용욱**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최순영 위원** 보충질의 다 끝났으면……

○**委員長 權哲賢** 아니, 있습니다. 또 하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오늘 하루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첫날이라서 열심히 들으려고 했고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하루종일 여기에 앉아 있어 봤는데 ‘참 우리 교육문제가 어려운 정책이구나’ 실감합니다. 특히 좁은 공간 내에서……

핵심적인 부분에서 여야 위원님들 간의 견해차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단위에서 교육현장,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동안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양면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원래 취지를 되살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마치 지역에서 정치지방생들의 관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5·31 지방선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3월 말 그러니까 3월 20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5·31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첫 번째 출마의 스타트 라인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네트워크 내지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 출마하려는 것이니까 그런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출마하게 되면 거의 다 운영위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운영위원이 되면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도록 심지어는 선거조직으로 학부모들을 이용하고 동원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올해 같은 경우에 4월 5일부터 선거 출마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이지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3월 말에 구성되어서 4월, 5월이 되면 기본적인 틀이 잡히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출마 예정자들은 학교 운영을 잘할 위원으로서의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출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정치하는 분들이 운영위원에 출마하게 되면 운영위원으로서의 소신을 주장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장이 기본적으로 학부모조직을, 학부모들의 여론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출마자들 같은 경우는 이 교장에 반하는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은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있는 당 해에는 선거출마자들의 학교운영위원 출마를 제한하는 내지는 금지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적하신 문제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좀더 다른 시각도 고려를 해 봐야 되니까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관계부처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2006년도에 전국의 운영위원들 중에서 5·31선거에 출마했던…… 공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분들도 어차피 정치를 하려고 5·31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이었으니까 공천에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경우까지 포함해서 시의원, 단체장까지 해서 공천신청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출마자는 분명하니까 할 수 있을 텐데 행정적으로 학교 당국은 공천 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거든요? 출마자만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공천신청자 현황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공천신청의 경우에는 각 정당이 지역별 내부……

○**안민석 위원** 적어도 한 학교에 운영위원이 많아야 10명 내외인데 교장 정도면 자기 학교 운영위원 10명 중에서 어느 분이 공천신청을 했는지 그 정도는 각 학교단위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출마자들만 전국적인 학교운영위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해 주시고 그것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까지 공천신청자까지 포함한 현황을 파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교육행정망을 통해서 정치출마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교육행정으로 선생님들의 잡무 부담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교원사기대책으로 그런 것들을 다 지방교육청에서 걸러내서 사회 각계나 각 부처에서 학교에 요구하는 각종 지시나 요구를 걸러내는 거름장치를 컴퓨터망에 만들어가지고 학교교육에 꼭 필요한 것만 내려가도록 제한을 해 놓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연구를……

○**안민석 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은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부모-학교-교사라는 삼각 주체가 협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틀이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틀이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고 있고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

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런 점에서 출마자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분명한 것이니까 어려움이 없을 텐데 공천신청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민석 위원** 그것은 정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출마자 정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안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신청은 안 하셨는데 우리 최순영 위원님께서 하십시오.

○**최순영 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지요?

○**委員長 權哲賢** 예, 하십시오.

○**최순영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평가해 보면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상임위가 교육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법안소위 구성 문제로 5개월 동안 소위원회 구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 심사도 전체위원회에서 팀별로 나누어서 편법으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전반기에 보면 227개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결된, 입법화된 것이 36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사립학교법과 동북아재단법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 중심으로 모든 회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상임위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방관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처리된 법안이 153건이나 됩니다. 이 원인은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둘러싼 의견 대립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비교섭단체를 무시한 양 교섭단체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양 교섭단체의 전횡이 벌어진다면 저는 전반기와 똑같이 후반기에도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소위가 다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안소위에 비교섭단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수의견을 인정해야 되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타당한 요구입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 구성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9석, 한나라당이 7석입니다.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2석입니다. 그렇다면 법안소위 정수를 6명으로 할 때는 3·2·1로 해야 되고, 더욱이 상임위원장은 소위원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6·2인데, 한나라당이 세 명을 고집한다면 3·2·1이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법안소위 정수를 7명으로 해서 3·3·1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침에 우리 임해규 위원님께서 후반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유기홍 위원이 학교 선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잘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꼭 학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도 있습니다. 저는 임해규 위원이 부천시의원할 때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하반기야말로 원활하게 교육상임위가 진행되기 위해서 법안소위 정수에 반드시 비교섭단체가 한 석 들어갈 수 있도록 양당이 잘 합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예, 잘 들었습니다.

간사님하고만 인연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하고도 인연이 좀 있어야 되지요.

○**김영숙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權哲賢** 예.

○**김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가 지난 4월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요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선임 안 하는 겁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심사와 고충심사,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막대한 교원들의 징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무엇 때문에 유명규 위원장직무대리가 지금까지도 있는지……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작년에 209건이예요. 그런데 지금 전반기인데도 205건이거든요. 그래서 왜 거기에 보직을 하지 않고 두는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다음 주에 발령이 날 겁니다.

○**김영숙 위원** 왜 그렇게 몇 달을 끌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여러 가지 인사 사정상 그랬습니다만 바로 될 겁니다.

○**김영숙 위원** 다른 데는 막 보직하려고 그러시면서 그것을 방치하는 것 보니까……

○**委員長 權哲賢**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았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보충질의는 1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회를 하기 시작하면 선례를 남길까봐 걱정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보충질의 1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이군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육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권철현	김교홍	김영숙	김영춘
민병두	안민석	이경숙	이군현
이은영	이주호	유기홍	임해규
정문현	주호영	최순영	최재성

○**청가 위원(2인)**

김홍일 정봉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충현
전문위원	구기성

○**정부측 참석자**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차관	이종서
차관보	김광조
정책홍보관리실 실장	정영선
재정기획관	황인철
기획총괄담당관 서기관	최은희

학 교 정 책 실	황	남	택
실 장	김	홍	섭
학 교 정 책 국 장	우	형	식
지방교육지원국장			
인적자원정책국	김	경	회
국 장	김	문	희
정책총괄과사무관	김	정	기
평 생 학 습 국 장	김	화	진
대 학 지 원 국 장	이	병	현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엄	상	현
기획홍보관리관	김	은	섭
감 사 관	곽	창	신
대학혁신추진단장	김	응	권
비 서 실 장	심	은	석
학교정책추진단장	황	지	현
울산국립대건설추진단장	김	영	준
혁신인사기획관	이	만	열
국사편찬위원장	권	진	수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유	명	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김	왕	복
상 임 위 원	나	중	화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김	용	욱
국제교육진흥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교홍 김영준 민병두 안민석 이경숙 이은영 유기홍 정봉주 최재성	열린우리당	2006. 6. 21
권철현 김영숙 이근현 이주호 임해규 정문현 주호영	한나라당	
김홍일 최순영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의안 회부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6. 4. 28 이계경·이인기·김석준·장윤석·박재완·김무성·이해봉·엄호성·이성권·김정훈·문희 의원 발의)

5월 1일 회부됨

영어교육진흥법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06. 5. 4 김기현·정갑윤·유기준·전여

옥·이인기·안상수·박상돈·오제세·엄호성·김명주·이혜훈 의원 발의)

5월 8일 회부됨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6. 5. 8 최순영·임인배·우윤근·곽성문·박기춘·김태환·장향숙·김충환·주승용·이광재·노영민·김원웅·김용갑·이상배·배일도·심재철·최규식·이경재·나경원·손봉숙·김학송·이운성·정종복·유승희·박영선·안민석·안택수·장윤석·최병국·이호웅·류근찬·이병석·김동철·강기정·유기준·김영주·박성범·원혜영·양형일·이재오·고진화·김정훈·이시종·김재경·김정부·김양수·심재엽·이강두·전여옥·이상민·문학진·서재관·이광철·김정권·권경석·황진하·임종인·박계동·공성진·김낙성·홍미영·배기선·안홍준·최구식·최용규·정갑윤·정봉주·이진구·정두언·서상기·박형준·정장선·이상경·한병도·박명광·권오을·김광원·유정복·최경환·최규성·허천·김성조·이명규·김교홍·박상돈·박희태·안상수·정문현·김태홍·박재완·김재윤·정화원·박종근·서병수·이경숙·이낙연·김효석·장경수·남경필·정덕구·권영길·안경률·정진석·정청래·이정일·엄호성·주성영·이해봉·임태희·이근현·강재섭·강혜숙·서갑원·이인기·이근식·이상열·윤건영·민병두·김홍일·김근태·이계안·정병국·이계경·박찬숙·홍문표·유기홍·김무성·이영순·현애자·심상정·백원우·김종률·이방호·김영덕·최철국·김석준·주호영·문석호·김형오·신국환·윤두환·문병호·김기현·김명주·양승조·김영선·이종걸·김성곤·노회찬·천영세·김춘진·이목희·염동연·조성래·박병석·노현송·우원식·우제항·이용희·유재건·김애실·김희선·황우여·김덕규·김학원·고조홍·임해규·전병현·권영세·신학용·최재성·유선호·임채정·안영근·장영달·조경태·유인태·진영·김형주·최재천·홍창선·정동채·조배숙·유필우·김재홍·이기우·조정식·이화영·이재창·정몽준·신중식·이주호·강창일·안병엽·신상진·정의용·이미경·신기남·변재

일 · 단병호 · 강기갑 · 한화갑 · 김기춘 · 심재덕 · 조일현 · 이규택 · 오제세 · 정형근 · 최성 · 이원영 · 안명옥 · 강길부 · 이성권 · 장복심 · 고흥길 · 이혜훈 · 정의화 · 진수희 · 정진섭 · 유승민 · 윤호중 · 지병문 · 이상호 · 이계진 · 한광원 · 최인기 · 김병호 · 이영호 · 박세환 의원 발의)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 발의)

(2006. 5. 8 유기홍 · 지병문 · 노현송 · 김태홍 · 백원우 · 조배숙 · 정봉주 · 김동철 · 이인영 · 구논희 · 민병두 · 김근태 · 이미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9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 발의)

(2006. 5. 26 안명옥 · 배일도 · 정의화 · 김석준 · 정화원 · 김무성 · 정종복 · 서상기 · 이운성 · 김영숙 의원 발의)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 발의)

(2006. 5. 26 안명옥 · 배일도 · 정의화 · 김석준 · 정화원 · 김무성 · 정종복 · 서상기 · 이운성 · 김영숙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 발의)

(2006. 5. 26 안명옥 · 배일도 · 정의화 · 김석준 · 정화원 · 김무성 · 정종복 · 서상기 · 이운성 · 김영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6일 회부됨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 발의)

(2006. 5. 30 이주호 · 공성진 · 김영선 · 김영숙 · 박세환 · 엄호성 · 윤건영 · 이균현 · 이해봉 · 임태희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 발의)

(2006. 5. 30 이주호 · 공성진 · 김영선 · 김영숙 · 박세환 · 엄호성 · 윤건영 · 이균현 · 이해봉 · 임태희 의원 발의)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 발의)

(2006. 5. 30 이주호 · 공성진 · 김영선 · 김영숙 · 박세환 · 엄호성 · 윤건영 · 이균현 · 이해

봉 · 임태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1일 회부됨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2006. 6. 9 정부 제출)

이상 3건 6월 20일 회부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 발의)

(2006. 6. 13 이병석 · 엄호성 · 김영숙 · 안상수 · 이인기 · 김태년 · 신국환 · 이해봉 · 신중식 · 김기현 의원 발의)

6월 21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06. 6. 16 이상민 · 권선택 · 김원웅 · 김태홍 · 김효석 · 박기춘 · 박상돈 · 이낙연 · 이영호 · 임태희 · 제종길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06. 6. 16 이상민 · 권선택 · 김원웅 · 김태홍 · 김효석 · 박기춘 · 박상돈 · 이낙연 · 이영호 · 임태희 · 제종길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 발의)

(2006. 5. 4 정장선 · 정희수 · 노영민 · 박상돈 · 김동철 · 안병엽 · 박기춘 · 주승용 · 우제창 · 채수찬 의원 발의)

5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 발의)

(2006. 6. 12 김양수 · 권오을 · 진수희 · 박형준 · 원희룡 · 정병국 · 이성권 · 엄호성 · 정문현 · 김학송 · 김무성 · 안홍준 의원 발의)

6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6. 5. 10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6 신동아 아파트 114동 1102호 김홍렬 외 114만 96인 으로부터 황우여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

출)

5월 11일 회부됨